



『친일·반일』 프레임을 깨자3: 일본을 이해하고 같이 발전해야

일 시 : 2019년 5월 31일(금) 오후 2시

장 소 :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 (중구 덕수궁길 15)

주 최 : 자유경제포럼

■ ————— 순 서 ————— ■

■ 사 회

- 현 진 권 (자유경제포럼 대표)

■ 발 제

- 류 석 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 조 경 엽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토 론

- 손 혜 정 (도서출판 기파랑)
- 임 종 화 (경기대 무역학과 강사)
- 이 애 란 (리버티코리아 포스트 발행인)

■ 질의·응답

■ 폐 회



■ 목 차 ■

■ 발 제

만주 경험과 남·북한의 발전경로	9
- 류 석 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한국경제에서 일본의 비중	29
- 조 경 엽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토 론

- 손 혜 정 (도서출판 기파랑)	47
- 임 종 화 (경기대 무역학과 강사)	58
- 이 애 란 (리버티코리아 포스트 발행인)	63



■ 정책토론회

발 제

■ 류 석 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 조 경 업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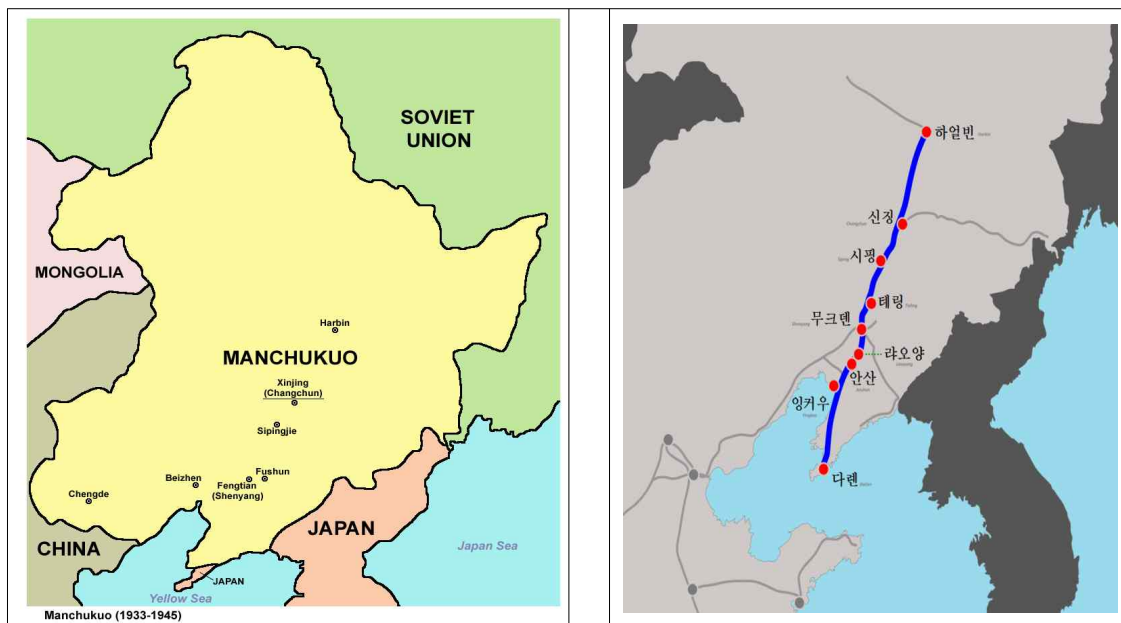
만주 경험과 남·북한의 발전경로

류 석 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1. 만주국과 이승만

[그림 1]이 보여주는 만주국(滿洲國)은 1932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후원으로 만주에 성립한 국가다.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남만주에 철도를 건설하고 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만주에 관동군을 주둔시키며 세력 확장을 도모했다. 만주의 토착 군벌 장작림(張作霖)은 일본의 후원을 받으며 중국 국민당 정부 장개석의 북벌에 대항했으나,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다고 여긴 일본에 의해 폭살당하고 만다. 장작림의 아들 장학량(張學良)은 중국 국민당과 손잡고 일본에 저항했다. 이에 자극받은 일본의 군부와 우익세력은 아예 만주를 식민지화하여 자원과 군수물자를 보급하는 병참기지로 만들려 했다.

[그림 1] 만주국(1932-1945)과 만주철도(Manchuria Train Express: MT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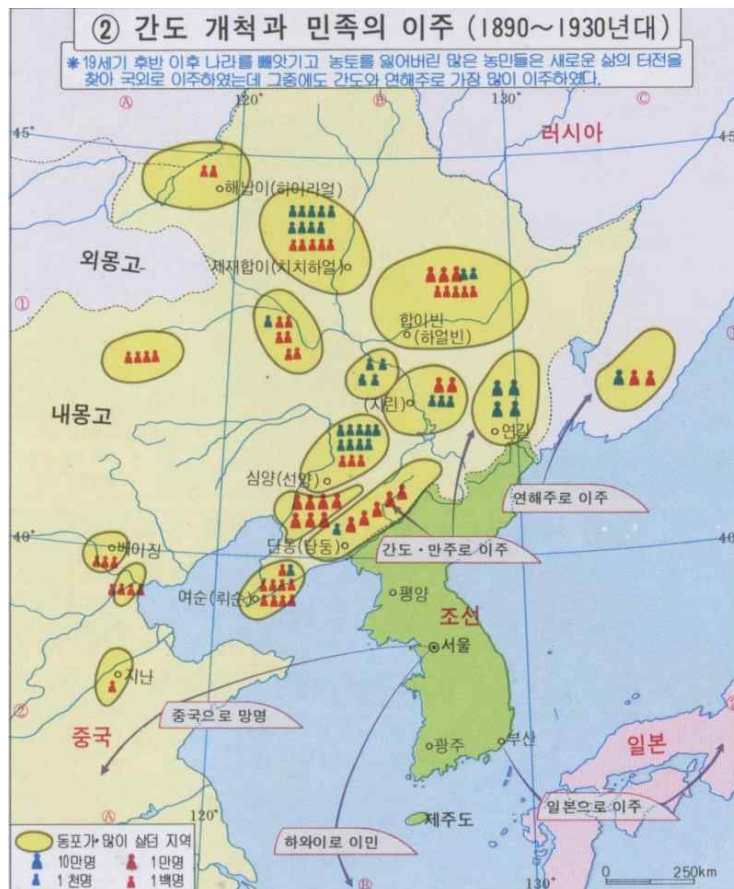


관동군 중심으로 만주침략 계획을 수립한 일본은 1931년 9월 봉천(奉天) 외곽의 유조호(류타오후柳條湖)에서 관동군 관할인 만주철도를 스스로 파괴하고, 이를 중국 측의 소행이라고 트집 잡아 군사행동을 개시했다. 관동군의 전격적인 군사작전으로 만주

반일·친일 프레임을 깨자3: 일본을 이해하고 같이 발전해야

전역을 장악한 일본은 1932년 3월 1일 괴뢰국가인 만주국(滿州國)을 세웠다. 일본은 1912년 신해혁명으로 폐위(廢位)된 청(淸)의 마지막 황제 푸이(溥儀)를 만주국의 형식적인 지도자로 내세우고, 수도를新京(新京: 長春)으로 하여 요녕(랴오닝遼寧)·길림(지린吉林)·흑룡강(헤이룽강黑龍江)·열하(러허熱河) 4성(省) 주민 약 3천만 명을 통제하는 괴뢰 국가를 세웠다. 이 시점에 만주로 이주한 한인의 규모는 이미 100만을 넘어섰다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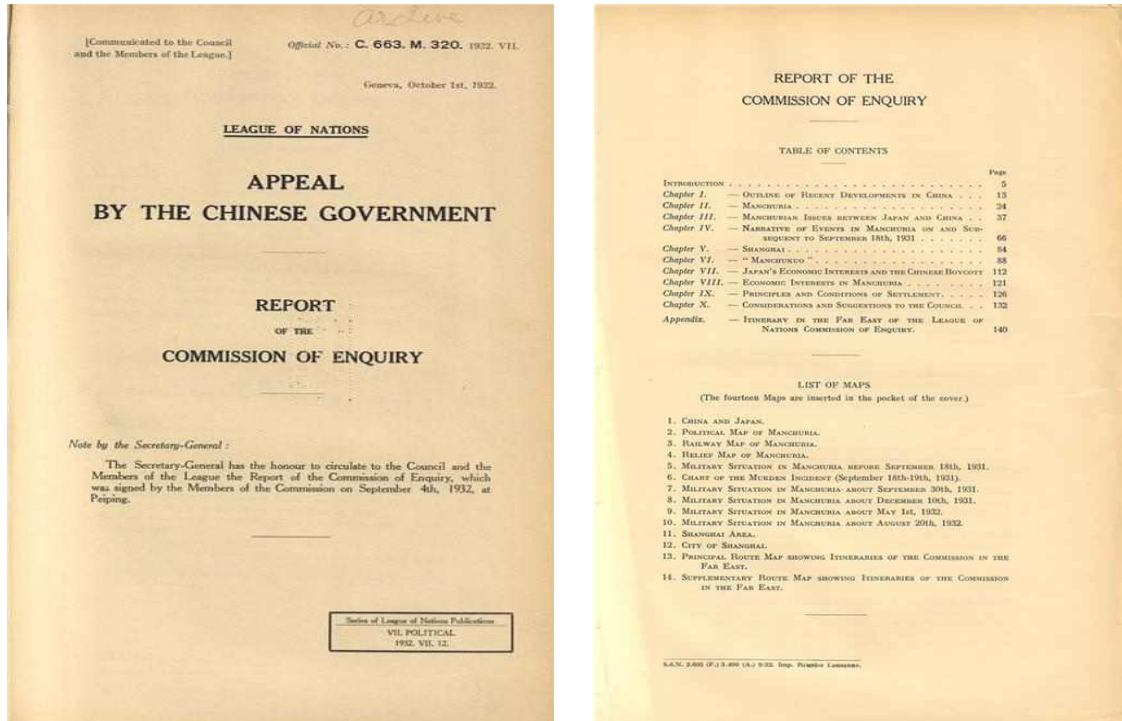
[그림 2] 간도 개척과 민족의 이주, 1890-1930 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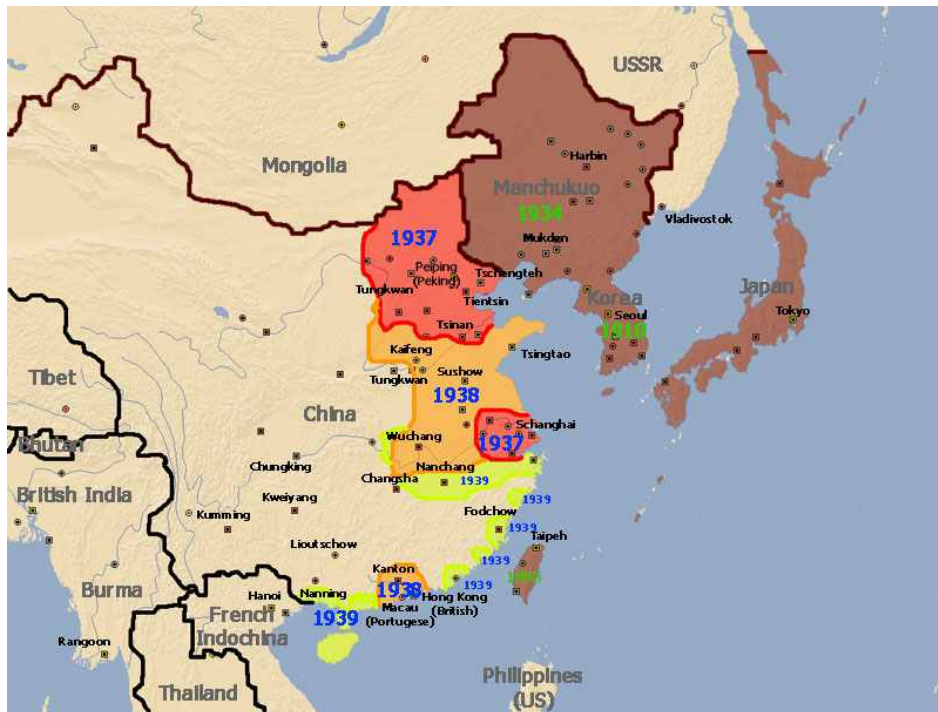
http://www.subkorea.com/xe/?category=43557&page=7&document_srl=44343
 (2019 5 27 검색)

중국은 국제사회에 일본의 만주 침략이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국제연맹 (League of Nations)은 영국인 Lytton을 단장으로 하고 미국, 독일, 이태리, 프랑스, 영국 대표 각 1인이 참여하는 6인 위원회를 구성해 현지조사를 마친 후 1932년 10월 만주문제에 관한 최종 보고서 “중국 정부의 항의” (Appeal by the Chinese Government, 일명 Lytton Report)를 국제연맹 이사회에 제출했다 [그림 3]. 1933년 2월 24일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연맹 본회의는 이 보고서를 기초로 일본군의 만주 철병과 만주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확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일본은 이에 반발해 같은 해 3월 27일 국제연맹을 탈퇴했다. 이후 일본은 본격적으로 전시체제로 전환하여 1937년 중일전쟁 그리고 1941년 태평양전쟁을 차례로 일으켰다 [그림 4].

[그림 3] 국제연맹 조사단의 만주문제 보고서 표지와 목차 (Lytton Report, 1932)



[그림 4] 일본의 만주 및 중국 침략



이승만은 이 국제연맹 회의를 활용해 한국의 독립이 필요함을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 1933년 1월 5일부터 제네바로 넘어가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다.¹⁾ 그는 한국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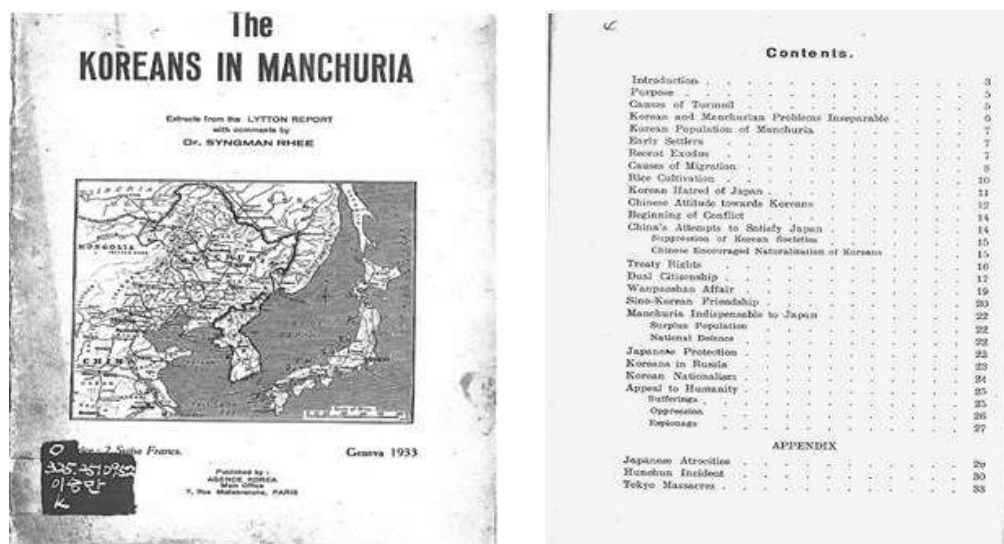
1) 이승만은 제네바 활동을 하면서 1934년 2월 21일 제네바 드뤼시호텔 식당에서 프란체스카 도너 반일·친일 프레임을 깨자: 일본을 이해하고 같이 발전해야

독립이 만주 평화의 핵심이라는 주장을 담은 "Koreans in Manchuria" 라는 영문 소책자를 출판해서 [표 1],²⁾ 국제연맹 사무국으로 하여금 각국 대표들에게 배포토록하고 관련된 언론 인터뷰도 적극 수행했다. 전체가 35쪽 분량인 이 소책자는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표지 상단에 'Extracts from the Lytton Report with Comments by Dr. Syngman Rhee' (이승만 박사가 코멘트를 붙인 리튼 리포트 발췌) 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이승만은 이 소책자의 머리말에서 출판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소책자의 목적은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국제연맹 회의에 참가한 각국 대표, 언론, 그리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정의의 편에 서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과 단체들이 극동의 문제에 대해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쟁점이라고 ‘리튼보고서’가 지적한 한인문제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함이다.”

이승만은 이 소책자에서 한국과 만주 문제는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으로 시작해, 만주에 이주한 한인의 규모, 이들의 이주 사유, ‘만보산 사건’으로 대표되는 한인과 일본인 및 중국인과의 갈등, 갈등의 배경이 되는 국적 문제, 그리고 이 모든 일의 근본적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주에 대한 일본의 이해관계를 설명하고, 또한 이 때문에 일본이 일으킨 여러 비인도적 만행과 군사적 첩보활동까지도 낱낱이 설명했다.

[그림 5] Syngman Rhee, 1933, *Koreans in Manchuria*, Paris: Agence Korea.



- (Francesca Donner)를 우연히 만나 약 2년 후인 1934년 10월 결혼했다.
- 2) 이 책자는 당시 프랑스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 서영해(1902~1949)의 도움으로 파리에서 출판되었다. 서영해는 열일곱 살 때 3·1운동에 참가한 뒤 중국 상해로 건너가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다 1920년 다시 프랑스로 건너가 임시정부 파리 통신원과 주불 대표위원 등으로 활약했다. 이승만은 자신의 일기에서 서영해를 비서라고도 부르며 제네바 활동의 핵심 측근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국역 이승만일기』 1933년 1월 13일, p. 167). 서영해는 1929년 불어로 된 역사소설 『어느 한국인의 삶』 (Autour d'une vie Coreene) 을 써서 3·1운동과 제암리 학살, 임시정부 수립 등 한국의 독립운동을 유럽에 알리는 활동을 했다 (조선일보, 2019. 2. 11, “在佛 독립운동가 서영해” 김성현 기자).

반일·친일 프레임을 깨자3: 일본을 이해하고 같이 발전해야

[표 1] *Koreans in Manchuria* 목차

머리말	
목적	
혼란의 원인들	
한국과 만주 문제는 분리 불가능	
만주의 한인 인구	
초기 이주자들	
최근의 대탈출	
이주의 원인들	
벼농사	
한인의 일본에 대한 증오	
한인에 대한 중국인의 태도	
갈등의 시작	
일본을 만족시키려는 중국의 노력	
한인사회에 대한 억압	
중국이 고무한 한인의 귀화	
조약에 따른 권리	
이중국적 문제	
만보산 사건	
한·중 간의 우의	
만주가 일본에 필요한 이유	
잉여인구	
일본의 국방	
일본의 보호	
러시아의 한인	
한인의 민족주의	
인도적 호소	
고통	
억압	
첩자들	
부록	
일본의 잔혹행위들	
훈춘 사건	
동경대학살	

이승만의 만주국 문제에 대한 제네바 활동은 그가 남긴 일기를 통해서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과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이 공동으로 출판한 『국역 이승만 일기』에 등장하는 당시 일기의 몇몇 구절만 살펴보아도 만주문제에 정통한 이승만의 판단을 가감 없이 살펴 볼 수 있다.

반일·친일 프레임을 깨자3: 일본을 이해하고 같이 발전해야

1933년 1월 13일 일기, 주 제네바 미국 영사 길버트와의 대화: “1910년 강대국들은 일본의 세계 정복 계획을 알지 못했다. 단지 한국을 희생하면 일본이 이에 만족하고 만주에서 개방정책을 펼칠 것이라고만 믿었다. 그러나 언젠가는 전 세계가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될 날이 오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제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한국은 일본의 침략 야욕의 첫 번째 단계이고, 만주가 다음 단계이며, 이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³⁾

1933년 2월 4일 일기, 국제연맹 노르웨이 대표 랭 박사와의 대화: “일본은 만주국이 일본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부 한인들도 포함하여 서류에 서명한 사람들에 의해 세워졌다고 하면서, 국제연맹 내에서는 물론 전 세계에 ‘리튼보고서’가 틀렸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다. 나는 이러한 일본의 서류를 반박할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를 국제연맹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뉴스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 준 공문 자격으로 제출하길 원한다. 사무국에게 이를 회원국들에게 돌리도록 요청하려면 중국보다는 다른 회원국이 제출하길 바라며, 이것이 현재로서는 내가 바라는 전부라고 답했다. 그는 나의 의도를 알겠다고 했다. 그는 또한 스웨덴 대표인 스웨덴 수상이 그렇게 할 지도 모르겠다고 언질을 주며 나를 위해 그와의 만남을 주선해 보겠노라고 덧붙였다.

1933년 2월 13일 일기: “나는 2월 13일부터 국제연맹이 만주의 모든 한인들을 비(非)일본인으로 선언하여 중국이나 그들이 원하는 다른 나라로 귀화할 수 있도록 최소한 그들의 권리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리튼보고서’를 근거로 문건을 작성했다. ‘리튼보고서’에는 일본이 중국인의 귀화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가 국제연맹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길 바라며 문건을 준비해 왔다.

1932년 만주국 건국 이전의 만주는 이승만이 *Koreans in Manchuria* 에서 지적한 것처럼 중·일 및 러·일의 갈등과 그 틈을 이용한 한인들의 무장 독립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공간이었다. 독립운동은 특히 3.1 운동 직후인 1920년 두드러진 성과를 냈다.⁴⁾ 그러나 그 때부터 일본의 집중적인 공격에 노출된 한인 독립군은 1921년 ‘자유

3) 이승만의 이와 같은 생각은 이 일기를 쓴 날로부터 8년 반 후인 1941년 여름 *Japan Inside Out* 을 출판하면서 대중적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승만은 이 책에서 일본이 머지않아 미국을 공격하리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실제 그해 12월 일본은 진주만 공습을 했다. 책은 날개 돋친 듯 팔렸다 (이승만, 2015,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 비봉).

4) “만주별판에서 독립군이 일본군과 독자의 힘으로 전투를 벌인 것은 3·1운동 직후인 1920년 한 해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 김좌진 장군의 북로군정서(北路軍政署)와 홍범도 장군의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는 서로 합심하여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큰 성과를 거둡니다. 봉오동전투와 청산리대첩이 그것이지요. 이후 일본군의 추격을 받은 독립군은 연해주 소련령인 알렉세예프스크 (스보보드니, 자유

시참변'을 겪으며 급속히 위축되었다.⁵⁾ 자유시참변은 만주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로 한인 독립군들이 무참히 희생된 사건이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성공하고 4년이 지난 1921년에도 극동에서는 여전히 제정러시아 군대인 백군(白軍)과 혁명군인 적군(赤軍)이 싸우고 있었다. 이 때 일본은 백군 편을 들어 적군과 싸웠다. 일본을 상대로 싸우던 한인 독립군은 그래서 당연히 러시아 적군 편을 들었다. 그러나 혁명의 과정이 극동에서도 적군의 승리로 마무리되자, 일본은 러시아 적군과 우호적인 관계를 모색했다. 러시아의 철병요구를 들어주는 조건으로 일본은 한인 독립군 해산을 요구했다. 이 요구에 따라 적군은 한인독립군을 무장해제했고, 이에 저항하면 처형했다. 즉 국제정세의 변화로 러시아 적군(赤軍)이 일본과 우호적 관계로 돌아서면서 자유시참변이 벌어졌다.⁶⁾ 한편, 중국은 국공내전으로

시)로 퇴각합니다. 그곳에서 여러 정파 간에 독립군의 헤게모니를 둘러싸고 큰 내분이 벌어지고 그 틈을 타서 소련 적군(赤軍)이 독립군의 무장해제를 강요하여 수백 명이 사살되는 등, 독립운동사에서 참으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유시참변'이라고 하지요. 이후 독립군이 일본군과 유격전이든 진지전이든 독자의 전선을 형성한 적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1930년대가 되면 중국공산당의 통제를 받는 항일연군과 팔로군에 속한 조선 청년들의 무장투쟁이 전개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본과 중국 간 전쟁의 일환이었습니다 (이영훈, 2002, 대한민국 이야기: pp. ??-??).

5) 우남위키 자유시 참변 (2019 5 27 검색)

https://www.unamwiki.org/w/%EC%9E%90%EC%9C%A0%EC%8B%9C_%EC%B0%B8%EB%B3%80

6) “청산리 전투 승리에 빛나던 항일 독립군은 왜 갑자기 와해되었을까? 독립군 와해의 계기가 됐던 '자유시참변'이라는 제목을 단 이상훈 기자의 조선일보 2016년 8월 18일 기사가 이 과정을 잘 정리하고 있다. 아래 그림 참조.



<https://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3&nNewsNumb=20160821206&nidx=21207>

반일·친일 프레임을 깨자3: 일본을 이해하고 같이 발전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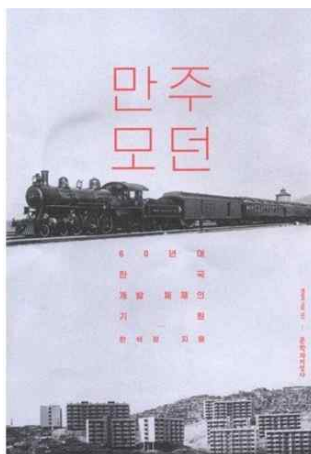
만주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이렇게 만주는 일본의 땅이나 마찬가지로 변해갔다.

이런 국제적 상황을 배경으로 만주국 건국 이후의 만주는 ‘기회의 땅’으로 다시 태어났다. 만주국은 일본·조선·만주·몽골·중국의 오족협화(五族協和)를 표방했다. 그러나 실권은 관동군사령관이 장악하고 있었고 중국인 국무총리 및 각부 대신은 장식품에 불과했다. 경제적으로도 일본이 만철(滿鐵)을 비롯한 국가적 사업의 이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닛산(日産)을 중심으로 일본이 설립한 만주중공업개발주식회사(滿業)가 개발을 주도했다. 일본의 군수물자 확보와 보급을 위한 각종 개발이 일사불란하게 진행되면서 만주는 점차 동양의 ‘엘도라도’로 변신했다. 만주국의 활력은 식민지 조선의 젊은이들이 대거 끌어 들였다. 태평양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러 1945년 8월 소련이 일본과 전쟁을 시작할 때까지 만주는 번창했다. 그러나 결국 관동군은 패퇴하면서 푸이는 체포되었고, ‘만주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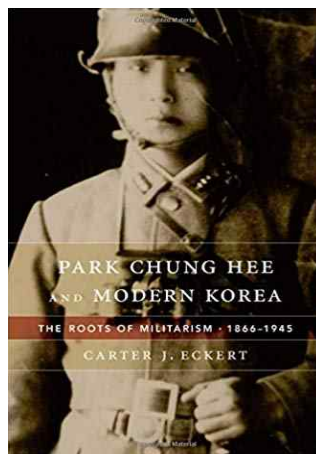
2. 만주국과 대한민국의 관계

요즘 특이하게도 이 ‘사라진’ 만주국과 1948년 건국해서 ‘세계사적인 성공’을 거둔 우리나라 즉 대한민국의 관계를 주제로 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다음의 세 가지 책이 대표적이다. 이 책들은 학술적으로 나름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책들은 일본의 과거 군국주의 역사에 대한 우리 국민의 말초적 적개심을 자극해 안 그래도 좋지 않은 일본에 대한 국민감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 물론 각각의 책들이 모두 의도적으로 그러한 효과를 노렸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책들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반일감정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림 3] 만주국과 대한민국의 관계를 다룬 책 3권



한석정, 2016.⁷⁾



Carter Eckert, 2016.⁸⁾



강상중·현무암, 2012.⁹⁾

7) 한석정, 2016, 『만주 모던: 60년대 한국 개발체제의 기원』 문학과지성사.

8) Carter Eckert, 2016, *Park Chung Hee and Modern Korea: The Roots of Militarism 1866-1945*. Belknap Press.

9) 강상중·현무암 저, 이목 역, 2012, 『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 다카키 마사오, 박정희에게 만주국이란 무엇이었는가』 책과함께.

이 책들이 가져 온 효과를 논의하기 전에, 우선 각각의 책 내용은 물론 그 저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눈에 띄는 사실은 저자들의 국적이 다양하다는 사실이다. 한석정은 국내 학자, Eckert 는 해외에서 한국학을 주도하는 미국 학자, 그리고 강상중·현무암은 일본에서 활동하는 재일교포 학자들이다. 그런 까닭에 한석정 책은 2016년 한글로 출판되었고, Eckert 책은 2016년 영어로, 그리고 강상중·현무암 책은 2010년 일본어로 각각 출판되었다. Eckert 책은 현재 한글 번역본이 없고, 강상중·현무암 책은 2012년 한글 번역본이 출판되었다. 저자들의 이와 같은 다국적 구성은 만주국과 대한민국의 관계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국제적으로 공유되는 현상임을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제부터는 각각의 책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한석정의 책 『만주 모던: 60년대 한국 개발체제의 기원』은 제목 그대로 ‘발전국가’ 대한민국을 만든 박정희의 근대화가 만주의 근대화에 기여를 두고 있음을 설명하는 책이다. ‘하드코어’ 사회과학에 ‘삽화’와 같은 다큐멘터리를 접합해서 이 책은 ‘1960년대 대한민국’이 ‘1930년대 만주국’의 복사판임을 입체적으로 그리고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독자들이 읽기에 부담되지 않는 터치로 그러나 집요하게 두 국가에서 벌어진 일들이 얼마나 같은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

다음, Eckert 의 책은 제목이 *Park Chung Hee and Modern Korea: The Roots of Militarism 1866-1945* 이다. 굳이 제목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박정희와 현대 한국: 군사주의의 뿌리, 1866-1945』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오늘날 근대화된 한국의 뿌리에 3번에 걸친 군사주의의 물결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 군사주의는 1866년부터 1907년까지 양요(洋擾)는 물론 일본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침략을 겪으며 조선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군사력을 키우고자한 노력을 말한다. 물론 이 노력은 1905년 을사늑약을 거쳐 조선의 군대가 1907년 해산되면서 큰 의미를 만들지 못했다. 두 번째 군사주의는 1931년 일본의 만주침략과 함께 시작되어 1945년 일본의 패망으로 마무리된 군국주의의 물결이다. 이 기간에는 만주를 중심으로 진행된 일본의 군사교육에 한국의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인적 그리고 제도적 훈련을 거치며 근대적인 위로부터의 개혁을 온몸으로 받아들인 기간이다. 마지막 세 번째 군사주의는 이번 책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1945년 해방과 함께 시작된 냉전의 기운이 6.25 전쟁을 거치면서 만주에서 익힌 두 번째 군사주의의 경험을 꽃피워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추동하는 힘으로 작용한 상황을 말한다. 물론 이 책은 두 번째 물결에 편승한 군사주의의 인적 제도적 확산과정과 특성에 초점을 맞춘다. 말할 것도 없이 그 정점에 박정희가 있기 때문이다. 이 책 역시 만주에서의 경험이 박정희의 근대화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영어책이라는 제약으로 국내의 일반 독자에게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강상중·현무암이 쓴 『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 다카기 마사오, 박정희에게 만주국이란 무엇이였는가』는 일본 고단샤(講談社)에서 출간한 <흥망 세계사> 시리즈

즈 18권 『대일본 만주제국의 유산』(2010) 을 완역하고,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박한용이 ‘만주국과 만주친일파 그리고 박정희’라는 해제를 덧붙인 책이다. 우선, 일본어판 제목과 한글판 제목이 다른 사실부터 주목해야 한다. 한글판 제목은 일본어판 제목에 비해 박정희를 ‘친일파’라고 낙인찍는 분위기를 물씬 풍긴다. 마지막에 덧붙인 박한용의 ‘해제’ 또한 박정희를 친일파라고 비난하기 위한 글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그가 속한 민족문제연구소는 바로 이런 일을 하기 위해 지역조직까지 갖춘 매우 특이한 연구소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파’에 대한 정의를 최대한 확대 해석하며, 친일파가 세운 대한민국은 정통성이 없는 나라 즉 ‘태어나선 안 될 나라’라는 인식을 유포시키는데 앞장서는 민간단체다. 이 단체가 2009년 출판한 『친일인명사전』은 바로 이와 같이 편파적인 단체가 자의적으로 선정한 총 4,389 명의 인물에 관한 이른바 친일행적을 담고 있다. 공신력을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구성과 활동이다. 더구나 이 단체는 2012년 ‘백년전쟁’이라는 허무맹랑한 동영상을 만들어 인터넷에 유포시키면서 이승만·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을 친일파라고 비난해 유족들과 ‘사자명예훼손’에 관한 법적 다툼도 겪고 있다. 실제 이 영상은 사실관계를 잘못 보여주어 여러 차례 내용이 수정되기도 했다.¹⁰⁾ 친일 문제에 관해서는 노무현 정부 하에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인 법적 기구로 활동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보고서가 국가의 권위 하에 작성된 공식적인 기록일 뿐이다. 이 보고서에는 총 1,006 명의 친일인사가 등장한다. 『친일인명사전』에 비해 규모가 약 1/4 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여기에는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았다.¹¹⁾

강상중·현무암의 책은 이와 같은 민족문제연구소의 입장을 너무나 잘 대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체의 연구실장이 ‘해제’를 덧붙였을 터이다. 이 책은 대한민국에서 ‘한강의 기적’을 만든 박정희와 전후 ‘일본의 부흥’에 결정적 역할을 한 기시 노부스케라는 두 인물이 과거 만주국의 역사와 유산을 공유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만주 인맥’이 중심이 된 ‘친일파’가 박정희를 정점으로 권력을 잡아 병영 국가적인 국력배양과 총력안보를 추구하면서 ‘한국적 민주주의’를 전개한 배경에 만주국의 유산이 있고, 나아가서 그 유산을 제공해 준 주인공이 바로 ‘만주국 산업개발 5개년 계획’으로 활약한 기시 노부스케라고 지적한다. 기시 노부스케는 일본에서 전전(戰前)에는 국가개조의 혁신관료로 뛰어난 수완을 발휘했고, 전후(戰後)에는 보수합동(保守合同)을 만들어 낸 주인공으로 최고 권력자의 지위에 올라 일본의 고도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미일안보조약 개정도 주도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10) 조선일보 2013 3 16 “류석춘 교수가 제기한 좌파영상 ‘백년전쟁’의 문제점”

11) 이렇게 뺄뺄이 된 친일파 숫자를 기록한 『친일인명사전』을 2015년 서울시 교육청은 국가 예산으로 정가 30만원에 단체로 구입해 산하 550 여개의 각 급 학교 도서관에 배포했다. 당연히 시의회로부터 예산을 함부로 쓴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가예산으로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학교에 이렇게 편향된 책을 보급하는 행태는 정치적 노림수가 없다면 생각하기 어려운 황당한 작태다. 이는 학생들을 독극물로 오염시키는 효과를 가짐은 물론 서울시교육감이 정치적, 이념적 동지로 생각하는 민족문제연구소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동기를 담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 교육청은 친일인명사전 구입에 사용된 예산을 즉시 반납하고 학생들과 학부형 그리고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

이 세 책은 모두 공통적으로 만주국이 사회진출의 기회가 막힌 식민지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하나의 ‘신천지’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설명한다. 1931년 만주사변이 벌어질 즈음 만주에는 이승만이 지적했듯이 이미 100만에 가까운 조선인이 이주한 상황이었다. 1932년 만주국 건국 이후에는 경제적 활력으로 이주한 한인의 숫자가 더욱 늘어났다. 금을 찾아, 가난을 벗어나고자, 그리고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찾아 식민지 청년들이 만주로, 만주로 떠났기 때문이다. 더욱이 1937년 중일전쟁의 시작과 함께 조선의 젊은이들에게도 일본의 군인이 되는 길이 열렸다. 박정희는 그런 기회를 잡으려는 젊은이의 한 사람일 뿐이었다. 만주군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일본육군사관학교를 거쳐 만주국군 보병 제8단의 소위로 임관한 박정희에게 ‘만주체험’은 과연 무엇이었나? 세 책이 공유하는 핵심 관심사다.

그러나 박정희를 기술하는 방식과 내용은 책마다 다르다. 한석정은 박정희의 개발체제가 만주국의 근대화를 이어받은 사실을 비교적 중립적으로 그러나 ‘정치적으로 올바른’ (politically correct) 방식으로¹²⁾ 이른바 ‘성인지감수성’을 도입해 설명한다. 저자는 제1장 “만주 모던으로의 길”에서 스스로 3장을 요약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국사 초유의 남성적 국가의 등장,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계보에서 만주국이 차지하는 위치, 만주국을 소환한 배경인 냉전과 한일수교 등을 짚어보고 1960년대 ‘재건’에 침윤된 만주국의 ‘건국’ 에토스 등을 통해 한국 발전국가의 역사적 맥락을 젠더 관점에서 논의한다” (73 쪽). 이어서 3장 “건국과 재건”의 텍스트는 “만주와 남성성”(176-188 쪽) 및 “국가와 폭력”(189-202 쪽) 등과 같은 ‘젠더감수성’에 민감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6장 ‘신체의 각성’에서도 같은 시각으로 자료를 분석한다.

젠더 관점으로 보았을 때 만주가 과연 “한국사 초유의 남성적 국가”였다는 주장은 과연 얼마나 사실인가? 설마 유교를 국교로 한 조선 나아가서 고려는 물론이고 그 이전 국가들이 남성적 국가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은 아닐 테니 말이다. 그렇다고 명치유신 전 혹은 후 일본이 남성적 국가가 아니었다고 말하려는 것도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사 초유의 남성적 국가’는 저자가 말하는 근대의 특성을 고스란히 담아낸 국가의 등장을 강조하는 말일 뿐이다.

그러나 이 말은 독일의 비스마르크 체제, 프랑스의 나폴레옹 체제, 그리고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와 같은 절대주의 국가의 특성이 명치유신을 거친 일본과 만주국에서 반복되었고 마침내 한국에서 박정희 체제로 구현되었다는 주장과 동일한 말이다. 그렇다면 저자의 주장에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을 하는데 페미니즘을 동원하고 또 젠더 시각에 의지할 필요는 없다. 이 개념들은 그냥 군더더기일 뿐이다. ‘파시즘’ ‘권위주의’ ‘국가주의’와 같은 담론만으로도 논지를 전개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다.

이에 반해 Eckert 책은 박정희 근대화를 중립적으로 그러나 군사적인 지향을 가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징을 가진 것으로 분석한다. 1)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군대가

12)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의 학술적 그리고 정치적 의미는 홍지수, 2017, 『트럼프를 당선시킨 PC의 정체』 (북앤피플)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권리만이 아니라 의무이기도 하다. 2) 국가적인 차원에서 부와 힘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무제한적으로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방지할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감시하고 통제하고 계획을 세워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3)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면된다’와 같은 헌신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4)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당사자들은 국가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업에 자발적으로 또한 동시에 규율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 에커트는 박정희의 정신세계가 보여주는 이러한 지향이 만주국에 뿌리를 둔 근대화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방대한 자료를 동원하여, 그러면서도 좌우 어느 쪽으로도 크게 치우치지 않고 균형있게 설명하고 있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은 강상중·현무암의 책이다. 이 책은 전후 일본과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떠올라 두 나라를 발전시키고 또 서로 협력하게 만드는데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한 박정희(1917~1979)와 기시 노부스케(1896~1987), 두 사람이 1945년 8월 해체된 만주국이 남긴 유산 그 자체라고 주장한다. 사실 이 주장 자체가 그리 문제될 이유는 없다. 다만 그런 주장을 하는 저자들의 선입견이 만들어 내는 해석의 편향성이 심각하다. 저자들은 특히 박정희의 근대화와 전후 일본의 발전이 국가를 중심으로 진행된 우익 독재의 산물이기 때문에 부정해야 한다는 논지를 편다. 그러나 전후 일본의 발전과 박정희의 근대화는 세계적인 찬사의 대상일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절대 다수의 국민이 지지를 보낸 선택이다. 5.16에 대한 장준하의 지지¹³⁾ 그리고 자주국방과 중화학공업화를 위한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의 지지¹⁴⁾가 증거다. 또한 전후 일본의 발전에 대한 일본 국민의 자부심도 마찬가지 증거다.

이 객관적 사실을 저자들은 ‘귀태’(鬼胎)라는 지극히 부정적인 용어로 비틀어 덮어 버린다. ‘귀태’란 ‘태어나선 안 될 아이’라는 뜻을 가진 부정적 단어다. 민족문제연구소의 ‘태어나선 안 될 나라’라는 표현과 정확히 궤를 같이 하는 용어다. 이 용어로 이 책은 도배가 되어 있다. 전체 4장으로 구성된 책의 각 장, 각 절의 제목마다 귀태라는 단어가 빠짐없이 등장한다. 예컨대 제1장 ‘제국의 귀태들’, 제2장 4절 ‘만주가 낳은 귀태들’, 제3장 ‘만주제국과 제국의 귀태들’, 제4장 1절 ‘되살아나는 귀태들’, 6절 ‘귀태들의 한일유착’ 등이다. 물론 박정희를 말할 때는 이 귀태라는 단어에 ‘친일파’와 ‘독재자’가 자동으로 따라 붙는다.

이 책은 또한 1940년 만 23의 나이에 군인이 되기 위해 만주군관학교에 입학한 박정희의 초기 경력을 두고 ‘친일파’의 결정적 증거로 삼는다.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이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린 상황이라는 상식적 해석을 거부한다. 그렇다면 1975년 29살의 나이에 박정희 유신정권 치하에서 유신헌법을 공부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노무현, 그리고 1980년 27살의 나이에 전두환 정권 치하에서 역시 유신헌법을 공부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문재인도 ‘유신의 앞잡이’라고 부르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 박정희는 안 되고 노무현·문재인은 되는 이유를 찾을 수 없다.

13) 김광동, 2018, 『4.19 와 5.16 연속된 근대화 혁명』 기파랑.

14) 김형아, 2005, 『박정희의 양날의 선택』 일조각.

박정희가 1939년 만 22세의 나이에 만주군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썼다는 ‘혈서’ 문제도 마찬가지다. 1939년 3월 31일자 만주신문에 보도된 기사는 제목을 “반도의 젊은 교사로부터 온 혈서: 군관 지원”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그러나 기사의 내용을 읽어 보면 나이 제한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지원이 정중히 거절됐다고 보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혈서가 얼마나 입학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사실 아리송한 대목이다. 혈서를 쓴 그 해에 박정희는 군관학교에 입학하지 못했다. 박정희는 그 바로 다음 해 다시 도전하여 결국 만주군관학교에 입학했다. 그렇지만 강상중·현무암의 책은 이 혈서 기사를 근거로 박정희가 친일파였음을 단정한다. 그렇다면 유신시절 대학생들이 공안당국에 잡혀가 ‘전향서’를 쓴 것도 ‘유신의 앞잡이’가 되는 근거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이와 같은 편파성은 주 저자인 강상중의 의식에 이미 예비되어 있다. 한 일간지와 의 대담 기사에서,¹⁵⁾ 강상중은 “이승만·박정희 시대에 미진했던 친일청산이 일종의 걸림돌이 되었고, 그것이 정당과 지역 대립 등 다양한 내부 분열의 큰 리트머스지가 되었다는 거죠. 산업화에 성공한 한국이 광복 70년을 맞이해 한·일 관계 개선과 자국의 내적 문제를 고민할 때 해방 후 역사의 진화 과정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죠”라고 말한다. 현학적으로 에둘러 말하지만 핵심은 ‘대한민국은 친일파 청산이 안 되서 문제’라는 말이다.

건국 당시 이승만의 친일청산이 미진했던 이유는 그 때의 상황이 ‘친북청산’을 더욱 요구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 있는 북한의 앞잡이들이 6.25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10여명의 국회의원까지 포섭한 상황에서,¹⁶⁾ 이승만은 ‘과거의 적’ 친일파를 청산하는 과제보다는 ‘현재의 적’ 공산당에 대처하는 과제가 당연히 우선한다고 판단했다.¹⁷⁾ 만약 이승만에 의해 반민특위 활동을 뒷받침하던 특경대가 1949년 6월 그리고 반민특위 자체가 같은 해 10월 해산되지 않았다면, 친일청산은 해를 넘기며 1950년 6.25 전쟁이 날 때까지 계속됐을 공산이 크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1950년 6월 시작된 전쟁에서 9월에 인천상륙작전을 해보지도 못하고 대구와 부산까지 북한군에 내주면서 지도에서 사라졌을 가능성이 크다.

친일청산 하다가 나라를 빼앗기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이승만의 선택을 비난할 수 없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1950년 4월 소련으로부터 남침전쟁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 김일성이 박헌영과 함께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박헌영이 스

15) 중앙일보, 2015년 3월 25일, “송호근 묻고 강상중 답하다.”

16) 1949년 5월부터 8월까지 남조선노동당의 프락치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현역 국회의원 10여 명이 검거되고 기소된 사건을 말한다.

17) 이승만은 1949년 2월 2일 ‘반민법 실시에 대하여’라는 특별담화문에서 이 법 때문에 공산세력이 준동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다고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위신을 보존하여 반민 법안을 단속한(빠른) 시일 내에 끝마치도록 할 것이다. (중략)...지금 반란 분자와 파괴 분자와 각처에서 살인, 방화를 하며 인명이 위태하고 지하공작이 긴밀한 이때 경관의 기술과 성격이 아니면 사태가 어려울 것인데 기왕에 범죄가 있는 것을 들춰내서 함부로 잡아들이는 것은 치안 확보 상 온당치 못한 일이다.”

탈린에게 했다는 발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박헌영은 스탈린에게 “북조선에서 첫 신호를 보내면 남조선 인민들이 집단적으로 봉기할 것”이라고 말하며 남침전쟁의 필요성을 설득했다.¹⁸⁾ 강상중은 이런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과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 북한의 위협이라는 문제는 대한민국이 1948년 건국되기 이전은 물론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강상중은 애써 외면한다. 대신 그 자리에 과거의 상처를 후벼 파 피고름을 만들어 상처를 덧나게 하고 있을 뿐이다. 외눈박이다.

자, 이제 종합해 보자. 이들 세 책의 주장을 요약하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 만주국을 통해 “식민지를 겪으며 근대가 모방되고 확산되었다”는 주장에 다른 아니다. 그러나 사실 이 이론은 우리에게 이미 낯설지 않은 주장이다. 왜냐하면 국내외의 학자들이 이 주장에 필요한 증거를 모아 수많은 문헌을 생산해 왔기 때문이다. 이른바 ‘식민지근대화론’이라고 알려진 연구 성과는 전문적인 학술논문이나 학술서적의 형식에서는 물론 대중적인 교양서적으로도 엄청나게 보급되어 이제는 이 용어를 모르는 국민이 없을 정도로 확산되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정년퇴직한 이영훈 교수 그리고 그가 이끄는 낙성대연구소는 이미 이 분야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수많은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대중에게 보급하는데도 성공했다. 예컨대 그가 쓴 『대한민국 이야기』(기파랑)는 2007년 출판되어 당대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다.¹⁹⁾ 이에 더해 다음과 같은 여러 학문 분야의 전문 학술서적들도 그러한 주장에 힘을 보태왔다.

- 호리 가즈오, 2003, 『한국 근대의 공업화』 전통과현대.
- 마이클 로빈슨·신기욱 역음, 2006, 『한국의 식민지 근대성』 삼인.
- 카터 에커트, 2008, 『제국의 후예』 푸른역사.

다음의 논문들도 마찬가지다.

- 윤해동, 2009, “‘숨은 신’을 비판할 수 있는가 - 김용섭의 ‘내재적 발전론’” 『역사학의 세기』 휴머니스트.
- 류석춘, 1999, “식민지배의 다양성과 탈식민지의 전개” 『전통과현대』 겨울호 (10호).

영문으로 된 문헌도 많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문헌은 한국, 브라질, 인도, 나이지리아, 네 나라의 식민지 경험이 근대 국가 형성에 미친 영향을 비교 분석한 프린스턴 대학의 Kohli 교수가 쓴 다음의 책이다. 이 책은 앞에서 설명한 식민지근대화론으로 입론한 책들과 정확히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한국을 설명하는 Part 1의 세 챕

18) KBS 뉴스, 2009 5 19, “한국전은 오판 때문…맥아더는 마마보이”
<http://news.kbs.co.kr/news/view.do?ncd=1778539> (2019 5 29 검색).

19) 이 책의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반증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이 책을 패러디한 책 『슬픈 대한민국 이야기』(김재진, 렛츠북, 2016)가 최근 출판되었다는 사실이다. 현재 김재진의 책은 인터넷에 도배가 되어, 젊은 세대가 이영훈의 책에 노출되는 일을 가로막고 있다.

터 제목만 보아도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Atul Kohli, 2004, *State-Directed Development: Political Power and Industrialization in the Global Periphe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장: The Colonial Origins of a Modern Political Economy: The Japanese Lineage of Korea's Cohesive-Capitalist State

2장: The Rhee Interregnum: Saving South Korea for Cohesive Capitalism

3장: A Cohesive-Capitalist State Reimposed: Park Chung Hee and Rapid Industrialization

이른바 ‘식민지근대화론’을 뒷받침 하고 있는 위의 문헌들이 만주국과 대한민국의 관계에 주목하는 최근 책들로부터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나아가서 인용이나 언급이 전혀 없다는 사실은 매우 기이한 현상이다. 더구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석정의 2016년 책『만주모던』의 저본이 1999년 출판된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동아대 출판부, 2009년 개정판)인 사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저본을 출판하고 지금의 책이 출판되기까지의 시간이 바로 앞에서 열거한 이른바 ‘식민지근대화론’이라고 불리는 연구 성과가 국내에서 집중적으로 등장하여 학계는 물론이고 일반에게까지 널리 알려진 시기이기 때문이다.

한석정에 비해 Eckert 는 이번 2016년 책보다 앞서 출판한 자신의 저서 『제국의 후예』(영문 책은 *Offspring of Empire: The Colonial Origins of Korean Capitalism 1876-1945*, 1991년 Seattle 의 U of Washington Press에서 출판, 이를 주익종이 번역한 국문 책 『제국의 후예』는 2008년 푸른역사에서 출판)가 식민지근대화론에 입각한 까닭에서인지 이 문제에 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²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열거한 식민지근대화론의 중요 문헌들을 전혀 인용하지 않았다. 예컨대, Kohli 는 미국에서 한국학을 연구하며 비슷한 주제에 관심을 가진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Eckert 의 눈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한편, 강상중·현무암의 저서는 편파적이다 못해 공격적이기까지 하다. 이들은 식민지근대화론을 ‘뉴라이트 사관’이라고 부르며 학문적으로는 물론 정치적으로 존재 자체를 아예 제거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민족문제연구소와 100 % 의기투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낯선 ‘귀태’라는 단어까지 동원하여 대한민국의 성공은 물론 일본

20) 재미있는 사실은 이 책의 한국어판 역자 주익종이 바로 이 책의 내용을 반박하는 『대군의 척후』(2008, 푸른역사)라는 책을 같은 해 같은 출판사에서 간행했다는 사실이다. 『제국의 후예』가 일제시대 김성수·김연수가 창업한 경성방직의 발전이 일본 제국주의가 만들어 준 기회에 편승한 수동적 발전이었다고 보는 반면, 『대군의 척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성방직의 발전은 한민족 내부의 동력이 능동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라고 해석한다. 결과적으로 저자와 역자 모두 ‘식민지수탈론’의 반대편에 있는 ‘식민지근대화론’ 입장에서 책을 썼지만, 에커트에 비해 주익종은 한민족 내부의 역량이 커가는 과정을 강조했다.

의 전후 성공을 부정적으로 그린다. 물론 이 공격에는 ‘극우’라는 단어도 항상 따라다닌다. 그러나 한 젊은 연구자의 말대로 “만주국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모체”였다.²¹⁾ 경제발전을 폄하해서 도대체 어쩌자는 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남한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북한의 정통성을 동경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은 ‘멘탈’이다.

3. 북한과 만주국의 관계

앞의 세 책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와 같은 주제로 책을 쓰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주제가 하나 더 있다. 다름 아닌 북한 문제다. 세 책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박정희 대한민국과 만주국’의 관계보다 더욱 밀접한 관계가 바로 ‘김일성 북한과 만주국’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입장을 적극 옹호해 온 한홍구마저 만주에서의 경험이 남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면서 똑같은 상황이 북한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²²⁾

"흔히 ‘유격대 국가’라고 불리는 이북은 주체사상의 시원을 항일무장투쟁에서부터 찾고 있으며, 혁명전통을 주체사상과 더불어 이북 사회를 유지하는 이데올로기의 두 축으로 삼고 있다. 오늘날까지도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 식으로!”라는 구호를 쉽게 들을 수 있는 이북에서 항일무장투쟁은 단지 지나간 역사의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정치와 사회의 운영에서 규범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제에 관해서는 이미 중요한 선행연구들이 등장했다. 다음의 글들이다.

- 박명림, 2008, “박정희와 김일성: 한국적 근대화의 두가지 길” 『역사비평』 봄호(통권 82호).
- 김용삼, 2016, 『김일성 신화의 진실』 북앤피플. 제6장: “박정희와 김일성을 배출한 만주.”
- 장자환, 2012. 『북한은 남한에게 무엇인가: 거짓의 두 왕국』 선.

이 논문과 책들은 모두 앞에서 지적한 만주국의 ‘파시즘’ 혹은 ‘권위주의’가 근대화에 미친 영향을 남과 북을 통해 각각 확인하고 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경우를 비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글들은 모두 만주의 유산이 남과 북에 크나 큰 영향을 미쳤지만, 남은 결국 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한 반면 북은 이를 최악으로 활용했다고 결론짓는다. 그러한 결론으로 가는 과정에 특별히 주목해야만 할 대목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박정희와 김일성의 만주 경험에 관한 차별성이다.

21) 한정석, 2019, “‘만주국’이 대한민국 경제개발의 모체” <http://road3.kr/?p=12503&cat=147> (2019 5 27 검색)

22) 한홍구, 2001, “대한민국에 미친 만주국의 유산” 『중국사연구』 16집, p. 242.

[그림 4] 1943년 10월 5일 야전 훈련 후 촬영한 88여단 대원 사진 속의 김일성.



주: 제1열 좌로부터 바탈린 (N. S. Batalin, 巴達林, 소련) 정치 부여단장, 이조린 (李兆麟, 일명 張壽錢 [张寿钱], 중국), 왕일지 (王一知, 주보중 부인), 여단장 주보중 (周保中, 중국), 김일성 (金日成, 제1영장, 조선), 부여단장 시린스키 (Timofei Nikitovich Shirinsky, 什林斯基, 1904~?). 제2열 좌로부터 장광적 (張光迪, 중국), 풍중운 (馮仲云, 중국), 왕효명 (王效明, 중국), 왕명귀 (王明貴, 중국), 팡시로 (彭施魯, 중국). 제3열 좌로부터 양청해 (楊淸海, 중국), 서철 (徐哲, 조선), 강신태 (姜信泰, 강건, 조선), 김광협 (金光俠, 조선), 수장청 (隋長靑, 중국). 제4열 좌로부터 안길 (安吉, 조선), 박덕산 (朴德山, 조선), 최용진 (崔勇進, 조선), 도우봉 (陶雨峰, 중국), 김경석 (金京石, 조선).

<https://www.unamwiki.org/w/%EC%A0%9C88%EB%8F%85%EB%A6%BD%EB%B3%B4%EB%B3%91%EC%97%AC%EB%8B%A8> (우남위키, 검색 2019 5 29)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김일성의 만주 경험은 일본과 러시아의 관계 변화 속에서 ‘자유시 참변’을 겪으며 참담한 모습이었다. 김일성은 그 때부터 2차대전 막바지에 소련이 참전을 결정할 때까지 그야말로 생존에 급급한 조건을 헤쳐 나가야 했고, 결국에는 소련군에 의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림 4]는 그러한 김일성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그의 경험에서 만주는 생존을 위한 투쟁 그 자체였다. 그는 박정희와 같이 위로부터의 근대화가 가져다 준 만주국의 활기찬 모습을 바라보고 공부하고 이해할 기회를 전혀 가질 수 없었다. 만주국 군대에 쫓기며 오로지 그러한 번영을 경멸하는 체험을 했을 뿐이었다. 한홍구가 말한 북한 ‘유격대 국가’의 원형은 바로 여기서부터 만들어졌음에 틀림없다.

만주국이라는 동일한 유산을 각자 “비틀어 자신의 것으로 만든” 남북한의 대결은 결

국 남한의 승리로 귀결되고 있다.²³⁾ 왜냐하면 북한은 유격대 국가를 만든 만주체험을 넘어 이제는 이승만이 1941년 책에서 주장했듯 일본의 천황제를 모방한 전체주의 수령체제 국가로 화석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²⁴⁾ 앞에서 검토한 책들 즉 한석정, 에커트, 그리고 강상중·현무암의 책은 어느 것도 북한과 만주국의 관계에 본격적인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대목이야말로 앞으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고 분석해야 할 대목이다.

최근 양상훈이 역설적으로 설명한 ‘이승만의 진짜 죄’야말로 친일파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핵심을 담고 있다.²⁵⁾ “김일성 정권 수립과 한반도 석권을 계획하고 있던 그들에게 이승만은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한국 내 지식층에 압도적이던 좌익 인사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이었다. 소련은 결국 6·25 남침까지 승인했다. '반(反)이승만'의 뿌리는 여기에 닿아 있다고 생각한다. '친일' 등은 엉터리로 씌운 모자일 뿐이다.”

4. 만주에 관한 원자료 문제와 만주 주민의 국적문제

국제적 쟁점으로서 만주문제를 설명하면서 국제연맹 제네바 회의의 기초자료가 되었던 문서 두 가지는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가장 결정적인 자료다. 당시 갈등하던 중국과 일본의 만주에 관한 입장을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객관적으로 정리한 국제연맹의 “Lytton Report”(1932)는 물론이고, 그 내용을 발췌하고 해설하여 한국독립의 필요성을 호소한 이승만의 *The Koreans in Manchuria* (1933)는 만주의 한인 문제를 당시 기준에서 최고 수준의 지성이 최고 수준의 자료를 모아 분석한 원자료로서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만주와 대한민국의 관계에 관심을 기울인 앞의 책들은 모두 이 자료들을 비중있게 참고하지 않았다. 강상중·현무암의 책에서 만주의 인구를 설명할 때 잠시 스치듯 등장할 뿐이고, 나머지 두 책에는 참고문헌에서조차 등장하지 않는다. 비록 이승만의 소책자는 연세대 도서관 귀중본실에 숨어 있어 접근이 어려웠다 치더라도, Lytton Report에 관한 정보는 인터넷에서도 차고 넘치는 데 말이다.

사실 ‘리튼 보고서’는 만주 문제에 대해 중국과 일본의 타협이 필요하다는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도 내놓았다. 예컨대 일본이 건설한 만주의 철도에 대한 기득권은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그러나 일본은 앞서 설명했듯이 국제연맹이 본회의를 통해 채택한 결의문 즉 군사행동에 통한 만주국 건설은 합법적이지 않다는 입장 때문에 국제연맹을 탈퇴했다.

23) 물론 문재인 정부의 등장 이후 남북 간에 전개되는 상황을 보며 오히려 그 역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다.

24) 이승만, 2015,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 비봉출판사. 이 책은 1941년 미국에서 영어로 출판된 이승만의 책 *Japan Inside Out* 을 번역한 책이다.

25) 조선일보 2019년 4월 18일 칼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17/2019041704187.html (2019 5 29 검색)

또한 이승만이 Koreans in Manchuria 에서 지적하듯이 ‘만보산 사건’으로 대표되는 만주의 한인 문제의 핵심은 일제의 술책으로 한인 농민과 중국인 농민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이 갈등이 다시 한반도 내부의 중국인에 대한 한인의 적대감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일본의 교묘한 분할지배 전략을 이승만은 이 문건에서 통렬히 비판했다.

1910년 이후 만주에 간 한인들은 국적이 일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만주에 간 한인이 일본에 저항적인 입장을 취하기 위해서는 중국 국적을 얻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이영훈 교수는 “화중과 만주에서의 독립운동은 중국 공산당에 속한 조선인(한인)들의 공산당 활동으로 전개되었다. 이 계열의 독립운동은 북한의 성립으로 이어지며, 대한민국의 성립에는 적대적이었다”고 설명한다 (자유경제원 2015년 발표문).

만약 한석정, 에커트, 그리고 강상중·현무암이 이 원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참고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재만 조선인들의 국적 문제가 분석의 쟁점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에컨대 한석정의 『만주모던』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조선인 2등 공민설’을 매우 적극적으로 부정한다. 즉 만주국에서는 일본인, 조선인, 만주인(중국인) 순서로 위계적인 신분의 차이가 있었다는 주장을 부정하며, 결국 일본인 대 나머지 주민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111-114 쪽). 그리하여 한석정은 “종국까지 조선인들은 만주국 국적을 갖지 못한 애매한 존재로 남았다”고 못을 박는다 (114쪽).

그러나 이 결론이 사실일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저자가 참고하지 않은 국제연맹 자료들은 모두 “이중국적” 문제를 만주 문제의 핵심으로 접근한다. 사실 당시 만주국의 이중국적 문제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였다. 우선 고려해야 할 문제는 1910년 이전과 이후에 만주로 간 조선인을 중국이 어떻게 받아들였나 하는 문제다. 한일합방 이전 중국은 만주로 온 조선인에게 중국 국적을 주었는가? 주었다면 어떤 조건에서 주었으며 이중국적도 허용하였는가? 아니면 끝까지 중국 국적을 부정하였는가?

마찬가지 문제가 1910년 합방 이후에도 벌어지지만, 그 양상은 더욱 복잡해진다. 일본의 한국지배를 ‘피해서’ 혹은 ‘이용해서’ 만주로 온 조선인 이주민을 당시 중국 정부는 일본인 국적으로 받아 들였는가? 아니면 중국 국적을 인정해 주며 받았는가? 중국 국적을 주었다면 어떤 조건에서 그렇게 하였으며, 혹시 일본과 중국이라는 두 개의 국적을 모두 주는 경우는 없었는가?

이와 같은 질문은 마침내 1932년 만주국이 건국된 후에는 더욱 복잡해진다. 만주국은 만주에 거주하는 중국인, 일본인, 조선인 등의 국적을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그리고 마침내 중국은 ‘국민당’ 정부와 ‘공산당’ 정부로 쪼개져 서로 싸운다. 이 와중에서 만주에 간 한인들의 국적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추가적인 분석이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다.

5. 결론을 대신하여

결론을 쓰려니 막막하다. 그래서 이 글을 준비하면서 읽게 된 월간조선 1991년 5월호에서 실린 미국 南일리노이주 대학 교수 김상기의 글로 결론을 대신하려 한다. 조갑제 그리고 이강호가 말했듯이 이 글은 가슴을 때리는 역사적 명문이다. 굳이 등소평의 ‘흑묘백묘’(黑猫白猫)론을 끄집어 낼 필요도 없다.

“박정희의 공로를 인정하면서도 그의 청년시절의 행적, 즉 일본육군의 장교로서의 과거를 거론하여 비판하는 입장이 있다. 日帝치하에서 그와 같은 길을 걸었던 한국청년의 수가 적지 않았으나, 이런 사람은 국가원수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가지고 있고 박정희는 친일본자일 수밖에 없고 우리 민족의 정기를 망친 자라고 극언하는 사람도 있다. 對日굴욕 외교, 일본 경제의 종속이 모두 그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에 대한 한국의 위상은 굴욕 종속과는 반대 방향으로 발전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의 실용주의 노선은 결국 어떤 명분론보다도 민족自尊의 길임이 입증된 것이다. 젊을 때 만군의 장교였던 사람이 만주별판에서 武力항쟁한 사람보다 훨씬 큰 업적을 이루었다는 사실은 민족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젊었을 때의 행적으로 한 사람의 생애와 업적을 평가하는 것이 무모한 일임을 알 수 있다. 크게 될 사람은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옛말은 거짓말이다.

이 시점에서 박정희를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글은 누구를 위하게 되는가? 아직도 군사문화가 완전히 청산되지 않는 상황에서 누구를 도우려고 박정희를 칭찬하는가? 이 글에 대하여 분개하고 필자를 욕할 독자가 많이 있음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정직하기 위하여 내가 보는 대로 진실을 말하고 싶은 것뿐이다. 3공, 4공 세력에 이 글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지도 않으며, 설사 약간의 도움이 된들 나쁠 것이 무엇인가? 과거에 우리는 黑과 白, 善과 惡을 명확히 가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黑과 白을 포괄하여 파악하는 정치적 성숙성이 요구되는 더 높은 단계로 왔다.

지난날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던 양심인사들이 민주화가 시작된 이래 보여 온 치졸무쌍한 작태도 볼 만큼 봤고, 독재자들의 큰 업적들이 새삼 돋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것이 독재로의 회귀를 원하는 마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박정희에 대한 올바른 평가 없이는 우리는 자기기만 속을 한동안 헤매게 될 것임을 지적하고 싶은 것뿐이다.

활자로 된 글은 영원히 남는다. 나는 이 글로 두고두고 욕을 먹겠다.”

한국경제에서 일본의 비중

조 경 업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 서론

□ 한·일 정치적 갈등이 경제적 갈등으로 확대되면서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1965년 한일협정이 체결된 이후 역사·영토·정치 문제를 둘러싼 한·일간 갈등이 수 없이 반복되었지만 정경분리원칙이 지켜지면서 지금과 같이 경제문제로 표면화된 적이 없음.

○ 지난해 우리나라 대법원이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강제징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들 기업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면서 갈등이 본격화됨.

－ 올해 대구지방법원은 신일철주금과 포스코의 국내 합작법인 PNR 주식압류 신청을 승인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보복관세, 일부 일본 제품 공급 정지, 비자발급제한, 한국으로의 송금 중지 등 한국을 상대로 한 보복 조치 목록 100여개를 이미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주일 한국기업은 세관통관 지연, 엄격한 대출 심사 등으로 경영환경에 악영향을 받고 있으며 불매운동으로 매출이 급감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 또한 대법원 판결 직후 일본의 3대 경제단체(게이다렌, 일본상공회의소, 경제동우회)와 한일경제협회는 이례적으로 공동성명을 내고 비판에 나서고 있음.

－ 과거에는 위안부,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가 불거져도 민간차원의 협력이 지속되면서 양국 간 갈등의 완충지대 역할을 담당해왔음.

－ 그러나 이번에는 지난해 11월 중순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양국 상공회의소 간 회의가 연기됐고, 오는 5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이던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도 무산되었음.

○ ‘단교’가 현실화되면 핵심소재·부품의 공급체인이 끊겨 한국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반일·친일 프레임을 깨자3: 일본을 이해하고 같이 발전해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22%를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 관련 종사자는 170만 명에 달하고 있어 이들 산업의 타격은 국민경제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경제보복에 이어 단교까지 언급되는 상황에서 신중론도 힘을 얻고 있음.

- 상호의존과 경쟁이 공존하는 한·일 경제 구조의 특성상 상호 경제적 보복은 공멸로 갈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음.
- 일본무역진흥공사에 따르면 2018년도 기준 한국에서 영업하는 기업 85%가 영업이익을 기록하여 아시아대양주 지역에 진출한 일본기업 중 가장 높은 흑자비율을 기록²⁶⁾
- 지난해 한국은 305억 달러 규모를 일본에 수출하고 일본으로부터 546억 달러 수입함으로써 총 교역규모는 851억 달러를 넘었음.
- 정부와 정치인들의 강경발언과 달리 상호 경제보복은 공멸로 가는 길이라는 우려감이 경제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음.

□ 최근 미·중 무역전쟁에서 보듯이 상호보복적인 무역분쟁은 비협조적 Nash 균형을 끝날 가능성이 협상과 타협을 통한 협조적 Nash 균형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무역전쟁의 결과는 누가 덜 손해를 보느냐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만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요인으로 현재의 수출규모, 관세율 수준, 기술수준 및 각종 비관세 장벽의 수단 등을 꼽을 수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경제에 차지하는 일본의 비중을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살펴보기로 함.

2. 무역전쟁의 승패를 가를 경제적 요인

□ 전통적인 경제학이론에서는 관세율 조정을 통해 이윤을 얻고자 할 때 협상 또는 보복관세가 죄수의 딜레마(prisoner dilemma)로 빠질 가능성을 차단해준다고 알려지고 있음.

- 교역조건(terms of trade)의 외부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교역 대상국들은 서로 관세

26) 신동아 716호, “한일 단교 외치는 일본인의 진짜 속내”.

를 조정할 유인이 항상 존재하지만 협상을 통해 협조적 균형에 도달할 수 있음.

- Johnson(1953)은 서로에게 손해로 귀결되는 비협조적 적정관세(Nash 균형)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협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Bagwell and Staiger(1999)은 GATT/WTO의 상호호혜주의와 무차별원칙과 같은 간단한 협상이 죄수게임(prisoner's dilemma)에서 탈출하는데 필요한 기본요소임을 강조하고 있음.²⁷⁾
- 특정 국가가 관세를 조정해서 교역조건 호전에 따른 이윤을 얻고자 할 때 상대국이에 상응하는 만큼 조정국가의 수출이 감소하도록 관세율을 조정하도록 허용한다면 모든 국가가 동일관세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임.
- 이들은 교역조건을 조절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외부성을 내재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상호호혜적이고 무차별적인 협상을 꼽고 있어 GATT/WTO의 존재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주로 활용되어 왔음.

□ 그러나 최근 미·중 무역전쟁에서 보듯이 현실 무역에서는 교역조건외부성 뿐만 아니라 무역분쟁을 촉발할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음.²⁸⁾

- Krugman(1980), Melitz(2003), Ossa(2011) 등은 협상을 통한 적정 관세율은 정부의 관세정책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관찰되지 않고 무역전쟁과 같은 비협조적 관세가 현실에서 더 자주 관찰되고 있다고 주장함.
- 제조업 생산 거점을 국내로 유인해서 이득을 보기위해 정부가 관세를 조정한다는 생산거점의 외부성(production reallocation externality)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들은 국제무역이 이루어지고 규모의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생산비용이 낮아져 무역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동일한 산업 내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이론적·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즉, 독점적 경쟁시장 하에서 무역이 증가하여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여 독점이윤이 증가하고 진입하는 기업이 늘어나 교역이 발생한다는 것임.

□ 최근의 미중 무역전쟁도 미중무역 불균형 해소하는 문제를 넘어 내수기업 확대 또는 수출기업의 독점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되고 있음.

- 미·중 무역전쟁이 무역불균형 해소를 넘어「시장경제 블록」대 「국가자본주의」의 세 대결 양상으로 치달고 있음.²⁹⁾

27) 상호호혜와 무차별원칙은 특정국가가 관세를 올려 상대국의 수출이 감소하게 되면 수출이 감소한 동일한 액수에 관세를 부과하는 WTO 원칙을 의미함

28)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Krugman(1980), Ossa(2011) 등은 새로운 무역이론을 제시하고 있음

- 미 백악관에서 발간한 최근 보고서는 중국 정부 주도의 기술 탈취로 세계 경제 체제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³⁰⁾
- 미국은 중국의 시장 왜곡적이며 공격적인 경제정책을 중국 특유의 국가자본주의체제의 산물이라고 비판하면서 ‘중국제조 2025’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물론 세계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시장경제 국가들이 연합해서 이러한 중국을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수출규모와 기술수준 뿐만 아니라 현행 관세율 수준도 무역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음.

- 미국의 대중 수출은 1304억 달러 수준이지만 중국의 대미국 수출은 5056억 3.9배나 많아 상호 관세 인상에 따른 피해는 중국이 클 수밖에 없음.
-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 감소는 내수산업으로 거점을 옮기거나 기술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켜 극복할 수 있는데, 경제규모와 기술수준이 미국이 중국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도 이번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불리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 중의 하나임.
- 현행 관세율도 무역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요인으로 꼽히는데, 현재 미국의 대중국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2.9%로 추정되며 중국의 대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은 4.7%로 추정되고 있어 현행 관세율도 중국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³¹⁾
 - － 관세율 인상은 수입재화 가격을 상승 시켜 소비자물가가 상승시키고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현행 관세율이 높을 경우 추가로 인상할 여력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함.

□ 이 밖에도 투자규제, 국채매각, 환율 및 금융제제 등 무역전쟁에서 동원할 무기는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이는 추후 논의로 남겨두기로 함.

3. 한국경제에서 일본의 비중

1) 한일 경제력 비교

□ ‘잃어버린 20년’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는 여전히 튼튼한 펀더멘털을 유지하고 있음

-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제2의 경제대국에서 3위로 떨어지고 일인당 GDP격차가 우리

29) 중앙일보(10월12일), “쫓지 마라, 누군가에게는 더 큰 기회 열린다.” 참조..

30) “How China’s Economic Aggression Threatens the Technolog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 White House Office of Trade and Manufacturing Policy, June 2018.

31) GTAP 9을 이용하여 추정.

와 크게 줄어들긴 했지만 한·일간 기술격차는 여전히 넘지 못할 벽처럼 존재하고 있음

- － 일본 인구는 약 1억 3천만명으로 우리보다 2.5배 많아 내수기반이 우리보다 탄탄하기 때문에 외부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저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음
- － GDP규모는 4조 8천억 달러로 우리보다 3.2배나 크고, 일인당 GDP는 3만 8천달러로 1.3배 많음
- － 외환보유고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조 2천5백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 우리보다 3.1배 많은 상황이며, 포춘 500대 기업에 속한 기업(산업)은 51(20)개로 우리보다 3.4(2.2)배나 많음
- － 우리나라의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1위인 품목이 2017년 기준으로 77개에 달해 1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일본은 171개로 5위를 차지하고 있음
- － R&D 2000대 기업수, R&D 1조원 초과 기업수, 세계 100대 혁신기업수는 일본이 우리보다 6.3배에서 9.7배나 많아 한·일간 기술격차는 향후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표 12> 한일 비교

	한국 (a)	일본 (b)	비교 (b/a)	비교연도
인구규모 (천명)	51,454	126,746	2.5	2017
명목GDP (10억 달러)	1,530.8	4,860.0	3.2	2017
일인당 GDP (달러)	29,750	38,345	1.3	2017
외환보유고(억 달러)	4,037	12,583	3.1	2018.12
포춘500대 기업(산업) (개)	15(9)	51(20)	3.4(2.2)	2017
세계수출시장점유율 1위 품목(개)	77개(12위)	171개(5위)	2.2	2017
시가총액 10조 이상기업(개)	25	101	4.0	2014.8
R&D 2000대 기업수(개)	56	353	6.3	2012 유럽집행위원회 집계
R&D 1조원 초과 기업 (개)	3	29	9.7	2012
세계100대 혁신기업수(개)	3	28	9.3	2013년 톰슨&로이트 선정

자료: 전경련, IMF data, OECD Stat. 한국은행, 한국무역협회.

2) 수출입 비중

(1) 한국 수출입 현황

- 한국의 2018년도 수출은 세계 6위, 수입은 세계 9위, 교역규모는 세계 9위를 차지하고 있음

- 한국의 수출은 6천억 달러로 전세계 수출액의 3.1%를 차지하고 있고, 수입은 5천 4백억 달러로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역의존도는 68.8%에 달함

<표 13> 한국 2018년도 수출입 규모

구분	세계의 수출입액 (백만 달러)	한국의 수출입액 (백만달러)	비중 (%)	순위
수출액	19,522,259	601,154	3.1%	6위
수입액	19,587,304	543,186	2.8%	9위
교역액	39,109,563	1,144,340	2.9%	9위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한국의 5대 수출 품목은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선박해양 구조물 및 부품, 자동차 부품이며, 5대 수입 품목은 원유, 반도체, 천연가스, 석유제품, 석탄임

- 2018년의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29.4% 증가한 2018년에 1,267억 달러를 수출 하였으나 올해 들어 수출이 급감하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음
- 석유제품은 409억 달러를 수출하여 2위를 기록하였으며, 자동차가 409억 달러를 수출하여 3위를 차지하고 있음
 - 올해 들어 석유제품의 수출이 둔화되고 신차 판매의 호조로 자동차 수출이 증가하면서 자동차가 2위로 올라섬
- 반도체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수입은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에너지 수입에 치중되어 있음

<표 14> 한국의 주요 수출품 (백만달러)

품 목	2018년		2019년 4월 누적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 계	604,860	5.4%	181,503	-6.9%
반도체	126,706	29.4%	31,620	-19.5%
자동차	40,887	-1.9%	14,003	5.0%
석유제품	46,350	32.3%	13,408	-4.1%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21,275	-49.6%	7,925	-8.7%
자동차부품	23,119	-0.1%	7,644	2.1%
합성수지	22,960	12.3%	7,051	-8.7%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24,856	-9.8%	6,663	-11.0%

자료: 한국무역협회

<표 15> 한국의 주요 수입품 (백만달러)

품 목	2018년		2019년 4월 누적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 계	535,202	11.9%	168,272	-4.5%
원유	80,393	34.9%	23,875	-0.8%
반도체	44,728	8.6%	15,116	6.6%
천연가스	23,189	48.5%	7,751	-1.5%
석유제품	21,443	41.8%	5,039	-19.6%
석탄	16,703	10.0%	4,919	-14.4%
컴퓨터	12,708	8.6%	4,105	-12.2%
정밀화학원료	13,021	31.9%	4,069	-1.6%

자료: 한국무역협회

□ 대중국 수출과 수입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일본 수출과 수입은 각각 5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음.

○ 대일본 수출은 305억 달러에 달하고 수입은 546억 달러에 달해 무역규모는 851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대일본 수출이 차지한 비중은 5%에 달하고, 수입은 10.2%에 달해 총 교역의 15.2%가 일본과 이루어지고 있음.

<표 16> 2018년도 한국의 10대 수출입국 (백만 달러)

수출				수입			
순위	국가	금액 (백만 달러)	비중	순위	국가	금액 (백만 달러)	비중
1위	중국	162,125	26.8	1위	중국	106,489	19.9
2위	미국	72,720	12.0	2위	미국	58,868	11.0
3위	베트남	48,622	8.0	3위	일본	54,604	10.2
4위	홍콩	45,996	7.6	4위	사우디아라비아	26,336	4.9
5위	일본	30,529	5.0	5위	독일	20,854	3.9
6위	대만	20,784	3.4	6위	호주	20,719	3.9
7위	인도(인디아)	15,606	2.6	7위	베트남	19,643	3.7
8위	필리핀	12,037	2.0	8위	러시아	17,504	3.3
9위	싱가포르	11,782	1.9	9위	대만	16,738	3.1
10위	멕시코	11,458	1.9	10위	카타르	16,294	3.0

자료: 한국무역협회

(2) 일본 수출입 현황

□ 일본은 중국, 미국, 독일에 이어 수출입 규모가 세계 4위에 위치하고 있음.

- 일본의 수출은 7천 3백억 달러로 전세계 수출액의 3.8%를 차지하고 있고, 수입은 7천 5백억 달러로 전세계 수입액의 3.8%를 차지하고 있음.

<표 17> 일본의 2018년도 무역규모

구분	세계수출입액 (백만 달러)	일본수출액 (백만 달러)	비중 (%)	순위
수출	19,522,259.0	732,629.0	3.75	4위
수입	19,587,304.0	748,849.0	3.82	4위
무역	39,109,563.0	1,481,477.0	3.79	4위

자료: 한국무역협회

□ 일본의 최대 교역 국가는 중국이고, 한국은 일본의 수출국 중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은 5위를 차지하고 있음.

- 일본의 수출에서 대한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1%에 달하고, 수입은 4.3%를 차지하고 있어 일본교역의 11.4%를 한국이 담당하고 있음.

- 한국은 대일본 교역에서 수입의 비중이 높은 반면 일본은 대한국 교역에서 수출의 비중이 높음.

— 따라서 수출규모 측면에서 관세전쟁은 한국보다는 일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표 18> 2018년 일본의 10대 수출입국 (백만 엔)

수출				수입			
순위	국가	금액 (백만 엔)	비중	순위	국가	금액 (백만 엔)	비중
1위	중국	15,901,033	19.5	1위	중국	19,187,145	23.2
2위	미국	15,465,772	19.0	2위	미국	9,011,130	10.9
3위	한국	5,793,127	7.1	3위	오스트레일리아	5,048,482	6.1
4위	대만	4,679,553	5.7	4위	사우디아라비아	3,732,746	4.5
5위	홍콩	3,832,861	4.7	5위	한국	3,548,886	4.3
6위	태국	3,562,564	4.4	6위	아랍에미리트연합	3,047,823	3.7
7위	싱가폴	2,584,174	3.2	7위	대만	2,995,388	3.6
8위	독일	2,306,101	2.8	8위	독일	2,868,922	3.5
9위	오스트레일리아	1,886,241	2.3	9위	태국	2,769,314	3.3
10위	베트남	1,814,152	2.2	10위	인도네시아	2,384,801	2.9

자료: 한국무역협회

□ 일본의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과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차지하고 있음.

○ 총 수출의 13.4%가 자동차 수출이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도 4.9%를 차지하고 있음.

○ 수입은 원유가 10.8%, 가스 6.6%, 석탄 3.4%를 차지하여 총 수입액의 20.8%가 에너지가 차지하고 있음.

<표 19> 일본의 10대 수출품(백만 엔)

순위	품목	금액 (백만 엔)	비중 (%)
1위	Motor cars and other motor vehicles principally designed for the transport of person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87.02), including station wagons and racing cars	10,942,055	13.4
2위	Commodities and transactions not classified according to kind	5,033,550	6.2
3위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of headings 87.01 to 87.05	3,960,007	4.9
4위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3,094,504	3.8
5위	Machines and apparatus of a kind used solely or principally for the manufacture of semiconductor boules or wafers, semiconductor devices,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or flat panel displays; machines and apparatus specified in note 9(c) to this chapter; parts and accessories:	2,728,982	3.3

자료: 한국무역협회

<표 20> 일본의 2018년 10대 수입품 (백만 엔)

순위	품목	금액 (백만 엔)	비중 (%)
1위	Petroleum oils and oils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 crude	8,905,727	10.8
2위	Petroleum gases and other gaseous hydrocarbons	5,420,902	6.6
3위	Telephone sets, including telephones for cellular networks or for other wireless networks; other apparatus for the transmission or reception of voice, images or other data, including apparatus for communication in a wired or wireless network (such as a local or wide area network), other than transmission or reception apparatus of heading 84.43, 85.25, 85.27 or 85.28	2,892,925	3.5
4위	Coal: briquettes, ovoids and similar solid fuels manufactured from coal	2,802,227	3.4
5위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2,224,657	2.7

자료: 한국무역협회

3) 한국의 대일본 주요 수입품

□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의 대부분이 소비재가 아닌 산업재이기 때문에 일본의 보복조치가 현실화 될 경우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일본 산 수입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반도체소재이며, 다음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 및 부품이 2위를 차지하고 있음

○ 핵심기술과 부품·소재 등의 공급단절은 첨단 산업의 벨류체인의 붕괴로 이어져 국내 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음.

－ 반도체 공정의 핵심물질인 불화수소 수입의 90%를 일본에 의존하고 있어 일본으로부터 수입 차질이 생길 경우 반도체 생산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음.

반일·친일 프레임을 깨자3: 일본을 이해하고 같이 발전해야

- 차량용 반도체도 주로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데 일본 수입이 중단되면 자동차 하청업체의 줄도산이 우려되고 있고 관련 종사자 170만 명의 고용이 위협받을 위험성이 높음.
 - 나아가 미래형 자동차 개발에 불가피한 차질이 발생할 전망
 - 반도체 제조장비 및 부품은 일본에 32.9%, 미국에 25.7%, 네덜란드에 25.9%를 의존하고 있는데 수입선을 돌릴 경우 물류비용이 늘어나 가격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전망
- 중국이 반도체를 본격적으로 공급하면서 우리의 반도체 수출이 타격을 받고 있는 와중에 일본에서 반도체 제조장비의 핵심 부품마저 제대로 공급 받지 못한다면 반도체 산업의 생존을 위협 받을 전망
- 이 밖에도 철강, 정밀화학원료, 자동차 부품 등 핵심 원자재 수급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

<표 21> 주요 품목별 대일 수출입

품목		금액 (천 달러)	비중 (%)	순위
철강	수출	4,072,734	12.0	2
	수입	6,796,181	31.1	2
철강판	수출	2,127,701	10.8	2
	수입	2,453,970	33.2	2
반도체	수출	1,238,043	1.0	9
	수입	4,518,952	10.1	3
자동차 부품	수출	912,155	3.9	7
	수입	991,251	18.3	2
플라스틱	수출	767,315	7.8	4
	수입	2,246,953	42.5	1
정밀화학	수출	2,041,368	8.7	2
	수입	4,910,909	16.4	2

자료: 한국무역협회

4) 관세율

- 관세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현행 관세율이라 할 수 있음.

○ 현행 관세율이 높을 경우 보복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관세를 인상할 여지가 작기 때문에 현행 관세율이 낮을수록 관세전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게 됨.

- 관세율이 인상될 경우 수입이 감소하는 효과도 있지만 수입재화의 가격이 높아져

반일·친일 프레임을 깨자3: 일본을 이해하고 같이 발전해야

물가가 상승하게 되어 소비자의 후생이 감소하게 됨.

- 한국의 대일본 평균 관세율은 4.6%에 달하며 일본의 대한국 관세율은 1.5%에 그치고 있어 우리보다 3.1%나 낮음.
- 한일간 관세전쟁이 발생한다면 한국이 추가적으로 관세를 인상할 여지가 작아 관세 측면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산업별로는 농림수산업과 음식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높고 철강과 전기전자가 낮은 관세율을 보이고 있음.

<표 22> 한국과 일본의 평균수입관세율

	한국의 대일본 수입관세	일본의 대한국 수입관세
농림수산업	27.7	5.3
광업	2.9	2.4
음식제조업	25.3	17.3
섬유제조	5.1	5.9
석유화학	5.3	1.6
철강	0.1	0.2
운송기기	6.6	0.2
전기전자	0.6	0.0
기타 제조업	5.9	0.4
전체	4.6	1.5

자료: GTAP 9

5) 기술의 수준

- 전경련(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은 미국, 일본, 중국에 비해 현재는 물론 5년 후에도 비교 열위에 있을 전망이다.

- 전경련의 조사에 따르면 ‘클라우드 슈밥’이 제시한 4차 산업혁명 12가지 분야인 , 바이오 , 사물인터넷 , 우주기술 , 3D프린팅 , 드론 , 블록체인 , 신재생에너지 , 첨단 소재 , 로봇 , 인공지능 , 증강현실 , 컴퓨팅기술(빅데이터 등)에서 한국은 미국, 일본, 중국에 비해 현재는 물론 5년 후에도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조사결과, 2018년 현재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12개 분야 기술 수준을 100으로 했을 때, 중국 108, 일본 117, 미국 130으로 세 나라 모두에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남
- 5년 후에도 중국 113, 일본 113, 미국 123로 일본과 미국에 대한 기술격차는 줄어들겠지만, 비교 열위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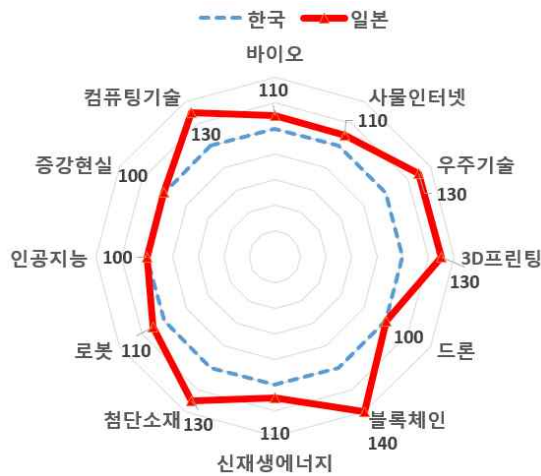
반일·친일 프레임을 깨자3: 일본을 이해하고 같이 발전해야

□ 2018년 현재 한국은 일본에 비해 4차 산업혁명 9개 분야에 열위, 3개 분야 경합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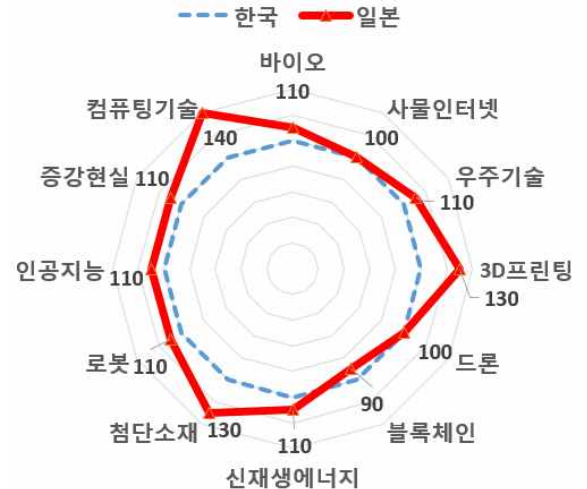
○ 비교 열위 분야는, 블록체인(이상 일본 140)·우주기술·3D프린팅·첨단소재·컴퓨팅기술 (이상 일본 130)·바이오·사물인터넷·신재생에너지·로봇(이상 일본 110)이며, 경합 기술은, 인공지능·증강현실·드론임.

○ 5년 후,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비교 열위에서 비교 우위로 전환 될 전망이나, 인공지능과 증강현실은 경합에서 비교 열위로 경쟁력이 뒤쳐질 것으로 조사됨.

〈한국과 일본의 현재 기술격차〉



〈한국과 일본의 5년 후 기술격차〉



6) CPTPP에서 소외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발효될 예정이지만 한일 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한국의 참여가 점점 불가능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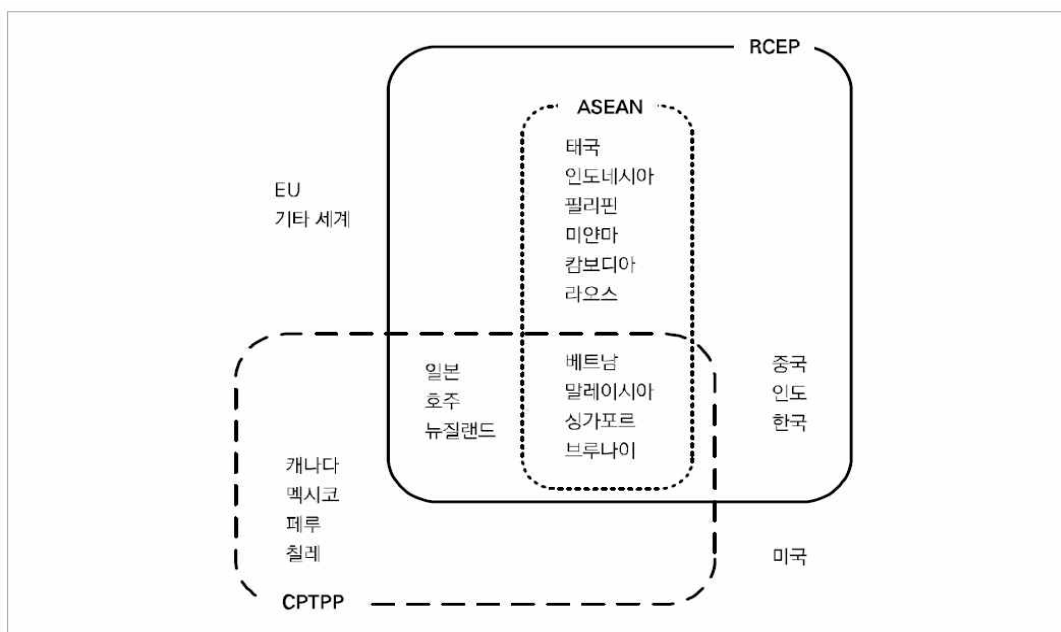
○ 지난해 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 선언으로 TPP는 좌초 위기에 놓였으나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은 2018년 3월에 칠레 산티아고에서 CPTPP 공식 서명식을 갖고 각국 비준 절차에 착수³²⁾

－ 미국의 불참으로 CPTPP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줄어들었으나, 11개 회원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세계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3%, 15%정도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

32) 참여국은 일본,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11개국임

- 특히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가치사슬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아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메가 FTA란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은 무시하기 어려움.
- 한국 정부 역시 뒤늦게 CPTPP의 중요성을 깨닫고 빠른 시일 내에 가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조차 내 놓지 못하고 있음.
- CPTPP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한일간 무역전쟁이 본격화 된다면 일본을 대체할 수출처를 찾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 둔화는 더욱 가속화 될 위험성이 높음.

<그림 16> 아태지역 메가 FTA: RCEP vs. CPTPP



자료: 장재원(2018), “RCEP이 한국 거시경제 안정성에 미치는 효과: 미중 무역전쟁 완충효과를 중심으로”에서 재인용

7) 비관세 장벽

□ 전경련에 따르면 일본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주일한국기업의 53.1%가 최근 한일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영업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음.

○ 악화된 분야로는 ‘신규 거래처 및 신사업 발굴의 곤란’이 37.3%로 가장 많았고, ‘일본 소비자의 한국산 제품 인식 악화(28.8%)’, ‘증빙서류 강화 등 일본정부의 재량권 한의 엄격화(15.3%)’가 뒤를 잇고 있음.

－ 새로운 먹거리를 끊임없이 발굴해야 하는 기업 특성상 일본내 한국기업들이 현장에서 상당히 고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기업 중 31.2%는 실제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 매출 감소의 범위는 ‘20%이내’가 85.0%로 가장 많았고, ‘21~40%’에 이르는 기업도 10.0%를 차지해 한일관계 냉각으로 인한 일본내 우리기업들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4. 결론

□ 한일 간 무역전쟁에서 한국은 미중 무역전쟁의 패자로 기록될 중국과 같은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높음.

- 한일 무역전쟁에서 한국이 유리한 점은 한국이 일본으로 수출한 규모보다 일본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규모가 크다는 점뿐임.
- 내수규모의 차이, 일본과 기술격차를 고려하면 한일 무역전쟁에 따른 한국기업의 거점 재조정 여력이 크게 낮을 것으로 판단됨.
- － 일본으로의 수출길이 막힐 경우 내수로 전환하거나 다른 수출처를 찾을 능력이 일본 기업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됨.
- － 특히 핵심 부품·소재를 일본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한일 무역전쟁은 한국기업의 경쟁력 하락뿐만 아니라 수출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음.
- － 한국의 성장을 견인하는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산업이 치명타를 입는 다면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적 위기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 현행 대일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이 일본이 부과하는 대한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보다 높다는 점도 한일 무역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
- －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사회적 후생이 감소하게 되면 소비자의 반발로 정치적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

□ 무역전쟁으로 치달을 비협조적 Nash 균형은 일본보다는 한국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이 국익을 위한 최선의 길임.

- 한국은 미중 무역전쟁의 피해 국가로 분류되고 있고 ‘자유 시장경제 블록’과 ‘국가 자본주의 체제’의 세 대결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한일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기대이상으로 클 것으로 전망됨.
- 정치적 갈등이 경제적 갈등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한일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보다는 한미일 동맹 차원에서 우리의 미래를 위한 관계로 발전시켜야 함.
- 우리와 같이 기축 통화국이 아니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국개방경제에서 경제적 동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 정책토론회

토론

- 손혜정 도서출판 기파랑
- 임종화 경기대 무역학과 강사
- 이애란 리버티코리아 포스트 발행인

반일 이데올로기는 반역이다

손 혜 정
도서출판 기파랑

1. ‘레이와’는 불편하고 ‘주체’는 괜찮은가?

올해 5월의 첫날은 현재 최고 인기 걸그룹 트와이스의 일본인 멤버 사나의 ‘레이와 논란’으로 시작되었다. 일본은 2019년 4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아키히토 천황이 퇴임하며 헤이세이(平成, 1989.01.08~2019.04.30 아키히토 시대의 일본 연호)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레이와(令和, 2019.05.01~ 나루히토 시대의 연호) 시대를 맞이했는데, 이에 대해 사나가 헤이세이 출생의 일본인으로서 한 시대 마감의 아쉬움, 하지만 새 시대를 향한 기대감을 짙막한 글로 표현했고 이것이 소위 논란이 되어버린 것이다.

논란이 될 것도 없는 내용의 글을 두고 ‘천황 옹호 입장’, ‘한국에서 돈 벌면서 눈치가 없다’, ‘군국주의 추앙’, ‘사죄하라’ 등 온갖 시비가 붙더니 급기야 ‘21세기 민주 시대에도 천황제 이어가는 일본’이라는 주제로 논란이 확산되었다. 물론 지나친 비약이라는 논박도 있었지만 사나의 레이와 글이 일본의 연호 사용과 천황제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 것이다.

일본 연호와 천황제 비판의 주요 골자는 천황제가 학문적 근거가 없는 신화를 포함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보편화 21세기에는 어울리지 않으므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과거 일본 제국주의, 군국주의라는 뒤튼린 역사 인식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같은 근거를 들어 북한의 ‘주체’ 연호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는 입장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체 연호는 김일성 출생연도인 1912년을 원년으로 한 연도표기법으로, 김일성 사후 만 3년이 되는 1997년에 김일성 신화 날조³³⁾와 반(反)개혁·개방, 전체주의 체제 유지, 그리고 대남 적화통일 전략·전술의 일환으로 채택된 것이다. 오랜 역사를 가진 일본의 연호는 문제시하면서 불과 몇 년 전에 ‘만들어진’ 북한의 주체 연호에 대해서는 어째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다.³⁴⁾ 주체야말로 한국의 지상목표인

33) 김일성 신화야말로 학문적 근거는커녕 비과학적, 비문명적 유치찬란한 날조로 점철되어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일본의 항복을 받아낸 것은 전적으로 김일성의 업적이라고 날조하고 있으며 김일성이 8년간 10만여 회 항일전투로 조국을 해방시켰다고 조작한다. 8년간에 10만여 회라고 하면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 평균 34회의 전투를 한 셈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김용삼, 『김일성 신화의 진실』, 북앤필름, 2016; 서옥식, 『북한 교과서 대해부』, 해맞이미디어, 2015, pp. 328-376 참고.

34) 위안부 운운하며 현재 중국으로 인신매매 당하고 있는 북한의 여성 인권과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

자유통일과 북한 주민의 해방, 인류 보편 가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이다.

과거사에 대해서도 일본은 수차례 반성의 입장을 표한 바 있으나 북한은 한국에 대해 여전히 무력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물론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천황은 1984년 전두환 대통령의 국빈방일 만찬사에서 과거 한일 역사에 대해 반성을 표명한 히로히토 천황을 시작으로 수차례 사과를 해왔었다.³⁵⁾ 또한 대한민국과 일본이 주권을 확립한 각각 1948년과 1952년 이후 양국은 반공 자유진영에서 미국을 매개로 한 공조 관계로 발전해왔다. 일본은 6·25전쟁의 사실상 16+1번째 참전국가로 한국을 후방 지원했으며(미군 후방기지, 한반도 지리 정보 제공, 미군의 병참 및 보급 지원 등) 특히 한국해역 내에서의 소해작전에 투입되어 기뢰 제거에 협력한 바도 있다.³⁶⁾ 1965년 국교정상화 수립 이후 양국은, 물론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갈등을 반복하면서도 안보와 경제적으로 협력해온 것이 사실이다.³⁷⁾

이에 반해 북한(정확히는 김가 집안과 체제 유지 집단)은 전쟁을 일으키거나 각종 무력 도발과 핵공갈, 역사 왜곡과 대남 심리전으로 내부 갈등을 초래해온 주적이다. 그리고 북한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다. 이러한 북한의 정점에 서있는 김가 왕조와 김일성 신화 날조의 일환인 주체 연호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일본의 레이와에 대해 온갖 시비를 거는 것은 무지의 소치이고 억지이다. 이러한 반일적 역량 낭비야말로 북한과 좌익 세력의 프레임 게임판에 놀아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레이와가 아니라 주체가 불편해야 맞다.

는 침묵하고 있는 것도 불가사의한 일이다. ‘민족’정기를 바로 잡아야 하고 북한은 ‘우리 민족’이라면서 21세기 보편 가치에 역행하는 북한의 김가 독재 체제와 착취당하는 ‘우리 민족’의 노예상태는 왜 문제제기하지 않는 것인가.

35) 히로히토 천황 이전에도 1965년 시나 에스사부로 외무대신, 1983년, 1984년 나카소네 총리의 과거사 반성 언급 사례가 있었고 2015년 아베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를 통한 과거사 사죄 언급까지 일본은 총 39회에 걸쳐 반성의 입장을 표명했다. 외교부, 『2015 일본 개황』, 2015년 7월 발행, pp. 242-247 참조. 『2015 일본 개황』에는 일본의 과거사 왜곡 발언도 함께 정리되어있는데, 일본이 역사를 왜곡한 부분이 있다면 시시비비를 잘 가려내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할 일이다. 그러나 한국도 환상에 사로잡힌 미신적, 종족주의적 역사 왜곡은 지양해야 한다.

36) 趙學濟, “韓國戰爭時의 日本 掃海部隊,” 『海洋戰略』, 第84號, 1994, pp. 79-97; 남기정 교수는 소해부대 대원의 수만 따져도 일본은 미국, 영국, 프랑스에 이어 6·25 참전 규모로 보면 세계 4위 규모라고 설명한 바 있다. 「중앙선데이」, 2015.09.26., “요시다 “한반도 해역 기뢰 제거는 전투행위...비밀로 하라”,” <https://news.joins.com/article/21043425> 최종 검색일: 2019.05.29.

37) 전후 냉전기 일본의 對한반도 정책은 이른바 ‘등거리 외교’였다. 냉전기는 평화주의 공세로 일본 사회도 좌익적 사조가 만연했었고, 일본의 좌익들은 공산 정권에 이념적 친밀감과 매력을 느끼고 있었다. 당시 일본 내 팽배했던 평화주의 지향과 일본 내 좌익 정치인들의 영향력이 작용하여 일본은 반공의 첨병으로써 치열하게 싸우며 발전하려 몸부림쳤던 박정희 시대의 유신을 이해하지 못했다. 유신 이 전쟁을 억지하는 요인이고 일본도 한반도 안정화와 전쟁에 휘말릴 위험에는 놓이지 않으려 하면서도, 박정희를 그저 독재라고만 매도하며 오히려 진자 독재를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인식을 가지기도 했었다. 그러나 미일동맹이 기본 노선이었기 때문에 일본은 미일관계, 한미일관계를 의식해야 했고 어쨌든 일북관계보다 한일관계를 우선시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또 상기할 바는 일본 내 반공적 인사들은 친한적이었고 한일의원연맹, 한일협력위원회 등과 같은 정·재계 중심의 조직으로 한일 연계를 강화하는 데 노력해왔다.

반일·친일 프레임을 깨자3: 일본을 이해하고 같이 발전해야

2. 좌경화 세력, 혹은 대중이 말하는 친일(親日)과 친일 청산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선 레이와는 불편하고 주제는 괜찮은 이 나라 사회적 풍조의 원인에 대해 논하기 전, 좌경화 세력들이 말하는 친일과 친일 청산이 무엇인지 잠깐 짚고 넘어가겠다.

원래 친일의 사전적 정의는 ‘일제의 침략에 협조하면서 국권을 상실케 하였거나, 일제를 등에 업고 동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독립운동을 방해한 행위를 총칭’해서 하는 말이라고 정의되어 있다.³⁸⁾ 아마 대다수 한국인들은 청산 대상 친일에 대해서 이러한 사전적 정의와 이미지를 떠올릴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아니든 좌경화 세력과 여론 주도층들의 친일은 대다수 한국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의미가 섞여 있다.³⁹⁾

예를 들어 박명림은 “한국전쟁의 구조: 기원·원인·영향” 논문에서 6·25전쟁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 다음의 인용문을 보면 국내 좌경화 세력 또는 여론 주도층의 친일 및 친일 청산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다.

혁명과 통일의 명분과 열정도 충족시키기 위해 오래 준비한 군사력으로 혁명전쟁을 일으켜 재빠르게 성공시키는 것, 김일성은 여기에 승부수를 던졌던 것이다.

해방된 한반도 전역에서 지주·소작제를 비롯한 일제시대의 식민지적 사회 경제 제도가 해체되고, 친일 민족 반역자들이 제거되었을 경우에도 과연 전쟁이 일어났을까에 대해서는 지극히 회의적이다.

박명림은 전쟁의 원인으로 ‘혁명적 열정’과 ‘친일파 숙청’이야말로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킨 명분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김일성의 ‘혁명적 열정’과 ‘친일파 숙청’이란 무엇인가? 공산주의 혁명을 뜻하는 것인가?⁴⁰⁾ 북한이야말로 공산주의자라면 ‘사전적 의미의 친일’ 분자도 등용하여 초대 내각을 구성했다. 또한 김일성의 항일빨치산 운동도, 중국공산당 소속 동북인민혁명군의 일원으로 한 것이며 말이 항일빨치산 운동이지 마

38) 네이버 지식백과, 검색일: 2019.05.28.

39) 여기서 ‘섞여 있다’라고 표현한 것은 선전선동이란 언제나 99%의 거짓과 1%의 진실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40) 박명림 논문 부분부터, 이신우, 『좌파몰락의 내재적 접근』, 기파랑, 2006, pp. 126-127 에서 발췌. 하지만 6·25전쟁의 원인은 심플하다. 6·25는 김일성이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해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남침을 감행함으로써 일어난 전쟁이다. 또한 한반도 남부는 농업 생산 기지, 북부는 공업 시설 설치 집중이라는 일제의 불균형적 유산으로 인해 당시 남북 간의 공업생산력과 병력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심지어 북한은 1948년 2월 8일 북한 군대 조선인민군 창군식을 거행하며 2만 5천의 병력이 소련제 신형 장비를 모두 갖추었었다.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서문당, 1991, pp. 77-78. 6·25 전쟁 당시 한국은 탱크 1대도 없었다.

적질이나 다른없는 것이었다.⁴¹⁾

이에 반해 한국은 초대 내각 구성에 있어서 오히려 그 ‘항일’적 정통성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승만의 농지개혁은 조선왕조 시대와 식민지 시기까지 내려온 지주제를 해체하여 소작농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자기 농지를 소유한 자작농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북한식 토지개혁을 감행했어야 하는 것인가? 혹 박명림 류의 학자들은 한반도가 적화통일됐어야 하고 자유민주와 시장경제 체제가 청산했어야 할 ‘일제의 잔재’이며 이 체제로 나라를 세우거나 번영시킨 위대한 사람들은 청산해야 할 친일이라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빨갱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친일파’라는 식의 얼토당토않은 억지 주장을 하는 것도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인가? 이번에 새 광복회장이 되었다는 김원웅 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은 “친일파 강점 74년 벗어나야”, “단적으로 말해 대한민국은 김원봉에게 서훈할 자격이 없다. 만약 김원봉이 살아있다면 훈장을 안 받았을 것이다. 내가 김원봉이라도 안 받는다. 친일파가 득세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에게 훈장을 줄 자격이 있는가. …”, “이 사회 주류는 친일 반민족세력으로 이를 민족세력으로 교체하는 것이 역사의 정통성을 바로잡는 일이다”⁴²⁾ 등과 같이 언급하였다. 이러한 발언에서 의문에 대한 답과 좌경화 세력들의 역사 인식을 짐작할 수 있음이다.

3. 반일 이데올로기의 근원: 김일성 신화 날조와 반일은 세트. 일본의 좌익도 한몫⁴³⁾

그렇다면 레이와는 불편하고 주체는 괜찮은 사회적 풍조와 좌경화 세력들의 역사 인식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인가?

우선 반일의 근원은 북한과 국내 좌익, 일본 좌익 세력에 있다. 태평양전쟁 이후 전후 역사의 반동으로써, 즉 전쟁 반대, 평화주의, 일본인의 이른바 ‘속죄의식’이라는 것을 좌익 세력(일본공산당과 공산주의자)이 도구로 이용하거나 파고들게 된다. 현재 한국에서 끊임없이 반일을 선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이 속죄의식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세력과 사회적 풍조가 있다. 여기에는 조총련이라는 존재가 있다.

조총련은 조선노동당의 일본지부로서 대남 적화 통일을 실현시키기 위해 일본의 좌익 세력과 연대하여 온갖 선전선동 및 공작을 감행한다. 이를 위해 김일성 신화 날조와 자료 수집 및 파기, 한국에 대한 일본의 인식 악화 공작, 역사 왜곡 등 자유민주

41) 김용삼, 2016; 서옥식, 2015 참조. 보천보 전투라는 신화도 해당 책들을 참고할 것.

42) 경향신문, “[원희복의 인물탐구] 새 광복회장 김원웅 ‘친일파 강점 74년 벗어나야,’” 2019.05.2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5251410001&code=940100

43) 해당 내용은 전 주일공사 홍형 인터뷰, 2019.05.08 참고 및 정리. 지면의 한계상 평양과 일본 좌익, 국내 좌익의 연계 구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추후 연구 과제로 남겨둬.

진영으로서의 한일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한다. 이러한 공작은 조총련과 재일조선대학 등이 재일조선인사회과학자협회와 노동당 당원 신분, 그리고 교원 등의 수많은 감투를 쓰고 조직적으로 행한다. 북한에 불리한 자료는 파기, 날조에 유리한 1차 사료와 근거는 수집, 식민지뿐 아니라 모든 전쟁에 있는 비극, 모든 사회와 역사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등은 크게 확대, 일반화, 반일 프레임화시킨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날조해낸 김일성 신화와 반일 역사는 이제 마치 객관적 사회과학 분야에 있는 무언가 처럼 만들어지고 하나의 집대성된 ‘반일 이데올로기’가 된다. 그리고 이 반일 이데올로기는 반공 자유민주를 무너뜨리는 구호와 도구로 활용된다. 일본은 이러한 조총련의 존재를 아직까지 그대로 두고 있다.

평양과 중국공산당의 정통성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항일투쟁밖에 없다. 물론 항일은 한국의 민족주의계열 포함 위대한 독립운동가들(공산주의자가 아닌)과 중국의 국민당도 다 한 것이지만 공산당들은 항일에 민족해방과 인민해방을 결부시킨다.⁴⁴⁾ 어쨌든 평양은 김일성의 가짜 혁명신화를 만들기 위해 ‘항일’이 필요했고 ‘이런 참혹한 식민지로부터 우리에게 해방을 가져다준 것은 장군님이시다, 사회주의다’라는 구호와 광고를 하기 위해 끊임없이 ‘참혹한 일제’를 가공해낸다. 김일성이 위대하기 위해 일제는 과거보다 현재에, 그리고 현재보다 미래에 더욱더 악마적이어야 한다. 아무리 반성해도 계속 청산해야 할 대상으로 남아있어줘야 한다.

예를 들어 상상 속의 참혹한 일제를 만들어내기 위해 동원되는 것 중 하나인 ‘강제 징용’⁴⁵⁾ 문제도, 박경식이라는 조총련계 학자에 의해 왜곡 서술된 ‘임금의 민족차별’ 연구가 국내 학계에도 확산, 마치 객관적인 사료와 근거인 것처럼 제시되고 있다.⁴⁶⁾ 하지만 조총련계 박경식의 이 연구는 1965년에 나온 것으로, 정황상 한일 국교정상화 방해 공작의 일환으로 추정된다.⁴⁷⁾ 그럼에도 박경식 자료를 근거로 한 국내 연구가 반세기 가까이 진행되었고, 이제 국내 한일관계 연구는 과거사와 관련하여 주로 일본만의 왜곡과 일본만의 반성을 기본 전제로 깔고 있다.

평양의 공작과 좌익 세력의 연대는 일본에서뿐만 아니라 당연히 국내에서도 수십 년간 진행되었고 김일성 신화와 세트로 발전된 반일 역사 프레임은 국내 학계 연구와 언론, 법 체계, 교과서 등을 통해 끊임없이 재생산되어 이제는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 반일 이데올로기는 한국인들의 사고와 언행을 지배하고 대한민국

44) 제국주의로부터의 해방은 어디까지나 연합국의 승전이지만 공산당이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의 ‘해방’은 계급적 의미이다.

45) ‘강제 징용’ 용어 자체도 용어 전술의 하나다. 징용 자체가 이미 법적인 강제가 있는 것인데 그 앞에 ‘강제’를 또 붙이는 것이다.

46) 이는 1차 세미나 이우연 박사 발제문과 논문 “戰時期(1937~1945) 일본으로 노무동원된 조선인 炭·鑛夫의 임금과 민족 간 격차,” 『경제사학』 제40권 제2호(통권 제61호), 2016, pp. 153-185 참고할 것.

47) 이우연, 이승만 학당 ‘반일 종족주의 시리즈’ 강의 참고. 북한과 좌익 세력들은 한일 국교정상화를 극렬 반대해놓고, 막상 국교정상화로 한일 교류가 활발해지자 이를 이용해 조총련계 재일조선인 학생들을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침투시키는 작업을 하였다.

의 정체성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김일성은 악마 같은 일제에 항거·투쟁한 ‘순수 민족정기’의 절정이고 한국은 김일성 같은 그런 신화적 존재가 없으므로 항일 민족 정통성이 결여된다. 이제 김일성 식 공산 혁명으로 ‘인민을 해방시키지 못한 것’도 한국 역사의 오점이 된다. 이러한 풍조와 공기가 각계각층을 통해 확산되어 ‘반일 이데올로기’는 한국 사회의 당연하고도 만연한 것이 되었다. 또한 일제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과 사과 요구는 당연하고 괜찮은 것이며 심지어 도덕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일제는 계속해서 악마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주체는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레이와만 불편한 것이다.

후쿠야마의 ‘역사적 종말’은 선부른 오판이었다. 마르크스주의의 망령은 이제 국내에서 ‘반일 이데올로기’로 무한변신하였다.

4. 반일 이데올로기가 침투할 수 있는 취약한 국민성⁴⁸⁾

반일 이데올로기가 아무리 김일성 신화 날조와 함께 발전했다지만 이러한 사조가 한국에 파고들 수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이는 아직도 ‘자유 한국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취약한 국민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1) 조선 미화, 대한민국 역사 폄하, 일본 경시

우선 대다수의 한국인은 아직 조선인의 정체성과 DNA를 가지고 있는 듯 하다. 그 예 중 하나가 친중 사대주의, 뿌리깊은 소중화 사상에 의한 일본 경시이다(대일 교린주의적). 우월한 선비의 나라 조선을 미개한 일본이 침략하였고 이 때문에 ‘우리 민족’이 핍박받아 근대화가 늦어졌다는 피해의식까지 더해졌다.

그러나 과연 조선 시대 내내 일본은 조선보다 미개했고 일본보다 조선이 우월한 문명이었을까? 일본은 1592년 임진왜란을 일으키기 전, 이미 크리스천 다이묘들이 8년에 걸쳐 유럽-일본을 왕복, 당시 필립 2세왕과 그레고리 8세 교황을 접견하고 왔었다. 이들이 당시 종교전쟁과 베스트팔렌 체제(1648)로 치닫고 있던 유럽의 정세를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보고한 지 1년 만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된다.⁴⁹⁾ 에도 시대가 쇄국정책을 펼쳤다고는 하지만 나가사키를 통해 서구 문물 수입과 세계 정세는 파악하고 있었고 일본은 1734년에 이미 네덜란드어 해부학 책을 번역하였다(<해체신서>). 일본의 근대화는 이미 이때부터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48) 이 부분은 본인의 평소 생각을 기반으로 작성. 사회과학적 이론을 토대로 일반화한 것이 아님을 알림. 여기서 제시하는 것 이외의 다른 요인들도 작용할 것이고 이 또한 추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두겠다.

49) Myongsob Kim, “Why No Westphalia-like Peace Order after the Toyotomi Hideyoshi War in Korea(1592~98)?,” *Korea Observer*, Vol. 45, No. 1, Spring 2014, pp. 1-31.

오천 년 한반도 역사상 처음으로 자유민주혁명이 일어난 1948년의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한국의 부국 역사를 폄하하는 것이 문제 중의 문제이다. 이 작업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것 중 하나가 대한제국과 조선 미화이다. 그러나 조선은 단 한 줌의 소수 양반이 ‘같은 우리 민족’을 노예로 착취해온 사대부들의 나라였다. 조선 역사는 양반에 의해 기록되어 왔다. 노비 제도를 확립한 세종이 당연히 성군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리고 조선을 붓의 나라라며 일종의 ‘문명국가’로 치켜세우는데 인류사는 원래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신권→왕권→인권과 개인의 자유를 쟁취해왔다. 이에 역행하고 상무정신이라고는 결여되어 있던 것이 조선이다.

이승만은 양녕대군의 후손이었으나 자유주의의 신념을 관철하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대한민국을 건국해냈다. 그 체제를 기반으로 박정희는 열심히 싸우면서 일하여 부국강병을 이루어냈다. 이러한 이승만, 박정희는 친일 독재로 매도하고 자궁할만한 한국의 역사를 부정한 채 조선 회귀적 사고를 갖는 것도 반일 이데올로기가 침투할 수 있게 한다.

2) 정치적 사기(PC, Political Correctness)⁵⁰⁾의 열풍

소련의 붕괴로 이데올로기 대결에서 공산주의가 패배했고 자유는 이제 도전받을 위협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지만 이는 선부른 오판이었다. 공산주의 악령은 ‘공산주의’, ‘전체주의’라는 진짜 얼굴을 가리고 ‘문화전’ 속에 파고들어 포스트모더니즘을 비롯해 네오마르크시즘, 페미니즘 등으로 무한변신했다. 성평등(양성평등에서 교묘하게 성평등으로 용어를 바꾸고 온갖 젠더의 평등 권리 주장), 다문화주의, 환경주의도 그중 하나이다. 서구에서는 종교와 인종의 갈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물론 한국에서도 모습을 바꾼 공산주의 현상들이(PC) 서구와 같이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한국에는 남북한 대립의 특수성이 더해졌다. 전 세계적 PC 열풍이 한국에서는 반일 이데올로기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친일은 이제 아무 데나 갖다 붙여진다. 일제 시대를 있는 그대로 보면 그저 ‘식민사관’으로 낙인찍어 버리고 욕일기가 아니어도 욕일기 형상을 연상하게 하면 일제 숭앙과 욕일기 프레임에 가뒤퍼된다. 대한민국 역사를 자랑스러워하면 친일 기득권이 득세한 나라일 뿐이라며 친일로 매도한다. 그러면서 항일의 정통성을 가진 것은 북한이고 이 점에서는 한국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강요한다. 이러한 ‘친일 낙인’과 ‘반일’은 그것이 절대적 선이고 도덕적이고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확신과 전제 없이 나올 수 없는 전체주의적 행태인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반일 PC로 인해 남발되어버린 친일 낙인은 돌이킬 수 없는 비도덕적 주홍글씨가 되고 이를 피하기 위해, 또는 도덕적 우월 지위를 유지 및 획득하기 위해 더 강도 높은 ‘반일’을 외치게 만든다. 반일 이데올

50) PC에 대해서는 홍지수, 『트럼프를 당선시킨 PC의 정체』, 북앤피플, 2017 참고.

로기는 이렇게 지배적이고 악순환된다.

3) 일제 시대와 친일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다

일제 시대와 친일 청산이라는 주제는 사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일제 시대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 좌경화 세력들은 “해방 이후 한국 사회의 모순과 폐단의 주요인은 조국과 민족을 배신한 친일세력이 온존한 데 있고 따라서 그들의 반민족행위를 심판하는 것은 민족정기를 바로잡고 사회정의를 세우는 일”⁵¹⁾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과연 일제 36년의 질곡을 헤쳐와야 했던 선배 세대들의 고뇌를 그렇게 쉽게 재단할 수 있는 것일까?

정말 매국 반역 행위를 하였거나 자기 조국을 향해 학살과 인종차별, 인권유린 등의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단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이 ‘친일’이라는 것이 그리 쉽게 접근하거나 간단명료하게 정의(定義)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가미카제 특공대 중 한국인 장교가 몇 명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연희전문 졸업 직후 비행조종사로 선발된 김상필 소위였다. 그의 형은 김상필에게 강력하게 탈출할 것을 권하였지만 형의 탈출 종용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조선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기서 도망치면 조국이 비웃음을 당하게 됩니다. 많은 동포가 더 한층 굴욕을 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리하라 히사시, 『특공으로 산화한 조선인』)

김 소위를 친일반민족행위자라고 단정 지어 말할 수 있는가? 김상필 소위를 비롯해 수많은 청년들을 이 지경으로 몰고 간 조선왕조에 친일반민족행위의 책임은 없는 것인가?

일제 시절 조선인 출신으로 유일하게 육군 중장까지 올라간 군인으로 전후 A급 전범으로 처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져간 홍사익이라는 인물이 있다. 홍사익은 대한제국 황제의 명령에 의해 유학생 신분으로 일본 육군중앙유년학교에 들어갔으나 도중인 1910년, 대한제국이 일본에 병합되고 말았다. 일제 장성이면서도 끝내 창씨개명을 거부한 채 홍사익이라는 이름으로 일관했던 그는 조국을 잃어버린 입장에서조차 학업을 계속하여 일본군 장교로 잔류하였다. 홍사익은 자신의 월급을 쪼개 동료 망명자나 독립군 가족을 돌보는 데에도 헌신했다. 또한 일제 장교로서 군복무를 하면서도 그는 자신의 잃어버린 조국 이가 왕조에 대한 참배도 매년 잊지 않았었다. 훗날 그는 군사 재판 과정에서 단 한마디의 변명도 없이 침묵으로만 일관했다. 이런 모순과 고뇌를 이해하지 않고 그저 ‘일제’, ‘친일’로 재단하여 홍사익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만 낙인찍

51) 안병직, 중앙일보, 2004.07.15., 이신우, 2006, p. 129에서 재인용.

을 수 있는가?⁵²⁾

식민지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전쟁, 역사, 사회에는 모순과 비극이 존재한다. 친일 낙인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는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그렇게 분류해버린 ‘그 친일세력’에게만 일제의 역사적 책임을 한정시키고 일제 역사에 대한 깊은 성찰과 반성의 기회를 막는 것이야말로 한국의 도약을 저해하는 매국 행위가 아닐까?

4) 민족주의(라고 쓰고 종족주의라고 읽는다)

민족주의라는 것은 국민 통합, 산업화, 국민국가 수립이라는 서구 근대화 과정에서 생겨나며 순기능을 하였다. 나중에 제국주의로 가는 역기능도 물론 있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민족주의는 오로지 항일적 개념, 국민 통합이라는 순기능보다 종족적 배타주의, 씨족 개념과 반일이 결합하여 일종의 종족주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⁵³⁾

그런데 이런 종족주의적 반일이 민족정기를 바로잡는 것이라 생각하는 자들은 대부분 북한과 김일성이 항일 민족의 정통성을 갖고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정작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한 사실은 은폐하거나 말하지 않거나 잘 모른다.

예를 들어 김좌진 장군이 소속되어 있던 북로군정서 2,500명의 독립군은 일본군과 손을 잡은 한인 공산주의자들과 소련군에 의해 학살당했다. 김좌진 장군도 한인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암살당했다. 공산주의자들은 공산 혁명이라면 매국적 ‘친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런 역사가 한국의 역사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국공내전은 결국 공산주의의 승전으로 끝났는데, 이는 항일 투쟁으로 장제스 국민당의 힘을 소모시킨 공산당의 작전이 성공했기 때문이다. 원래 장제스도 일본군도 전면전을 원하지 않은 관계로 전투를 확대하려는 목표는 없었으나 스탈린의 계략으로 일본군은 중국의 광활한 심장부에 끌어들여지게 된다(소련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 공산당과 연합해 일본에 맞서자는 국공합작이 시작되었으나 결국 이 조치는 훨씬 약세였던 공산당이 국민당 뒤에서 세력을 키우는 시간과 여유를 준 꼴이 되었다. 항일투쟁은 늘 장제스의 몫이었고 이런 장제스를 후방 공격한 것은 다름 아닌 공산당이였다.⁵⁴⁾

‘우리민족끼리’를 내세워 순수 민족정기로 자주적 통일(적화통일)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을 배타주의적 항일민족주의로 반일, 반미하게 하여 대리전을 치르게 해놓고는 정작 북한은 항상 뒤에서 미북 대화, 일북 수교를 도모한다. 그리고 우리민족끼리의 그 민족은 대다수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한민족도 아니다. 김일성민족주의이다.

대한민국 부정과 조선 회귀적 사고, 반일 PC, 종족주의, 그리고 엉겨붙어 있는 모

52) 김상필과 홍사익의 내용은 이신우, 2006, pp. 127-135 발췌 및 참고.

53) 이영훈, 이승만학당 강의 시리즈 참고.

54) 장용·존 헬리데이, 황의방 외 역, 『마오 -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 까치, 2006.

순과 고뇌, 복잡한 인생사, 삶 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신적 수준 등 취약한 국민성이 반일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총체적 난국으로 치닫고 있다.

5. 대한민국 국민이 되자: 친일은 애국이고 반일은 반역이자 반문명이다

사나의 레이와 논란을 통해 레이와는 안 되고 주체는 괜찮은 이유와 친일·반일 프레임이라는 한국의 병폐적 현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그 원인과 반일 이데올로기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첫째, 북한과 국내·일본 좌익 세력들에 의한 대남 적화통일 전략이다. 북한의 체제 유지를 위해 날조되는 김일성 신화에 따라 일제는 점점 악마화되어가고 좌경화 세력들이 청산해야 할 일제의 잔재라고 비난하는 건국·부국 세력도 그에 정확히 비례하여 악마화되어갔다. 김일성이 위대하기 위해 일제는 끊임없이 잔혹해야 하고 김일성이 위대하기 때문에 한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는 폄하한다. 반일 이데올로기는 이렇게 형성되었고 또 발전한 것이다.

친일이라고 하면 매국 행위나 동족 배반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는 대중의 인식(또는 사전적 정의)에 편승하여 좌경화 세력들의 인식이 더해진 것도 반일을 지배적 이데올로기로 만든다. 여기서 좌경화 세력들의 친일 및 친일 청산 인식이란 북한식 토지개혁을 하지 않고 공산혁명으로 적화통일됐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막은 (48년 건국과 6·25전쟁)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일제의 잔재이며 이 체제로 건국·부국을 일으킨 세력들이 청산해야 할 일제 잔재이고 친일이라는 것이다.

둘째, 아무리 김일성 신화 날조와 세트로 형성되고 발전했다지만 반일 이데올로기가 침투할 수 있는 취약한 국민성에도 책임이 있다. 이는 한국인이 아직 ‘자유 한국인’, ‘대한민국 국민’이 되지 못한 이유가 가장 크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부정한 채 조선 회귀적 사고를 갖는 것은 반일 이데올로기가 쉽게 파고들게 만든다. 또한 친일 낙인찍기와 반일은 ‘정치적 올바름’이 되어버렸는데 이 PC는 반일이라는 도덕성을 내세워 온갖 것에 친일 낙인을 찍는 전체주의적 행태이다. 반일 PC는 한국인으로 하여금 일본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가질 수 없게 만들고 반일 주홍글씨를 피하기 위해 더더욱 반일을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한다. 일제 시대, 아니 인간의 삶에 대한 부족한 성찰과 사색하지 않는 정신적 수준도 반일 이데올로기에 취약하다. 일제 시대와 친일은 쉽게 재단할 수도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인의 반일 종족주의이다. 순수 민족정기에 대한 집착과 반일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정의(正義)인 줄 착각한다. 종족주의가 반일 이데올로기를 만들었고 또 반일 이데올로기가 종족주의를 만든다. 이러한 취약한 국민성과 반일 이데올로기가 결합하여 한국을 문명적

으로 퇴행시키고 있다.

이제는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반일 이데올로기를 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일 이데올로기가 김일성 신화 날조와 세트라는 점과 반일은 그래서 반역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국이 항일 대리전을 치르는 동안 북한과 중국은 일본과 무엇을 도모하는지도 제대로 알아야 한다. 한국이 반일하여 일본과, 그리고 궁극적으로 미국과 멀어져 고립되면 누구에게 가장 이로운지 답은 이미 나와있지 않은가? 반일 이데올로기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자진해서 바꾸고 붕괴시키며 평양 체제를 유지 및 이롭게 도와주는 이적 행위나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자유민주의 문명국가를 퇴행시키고 자유 가치를 상실하게 하는 반문명적 이데올로기이다.

프레임에 벗어나 한국은 이제 ‘친일’을 해야 한다. 각각 자유로운 독립국들로서 현대 한국이 일본과 자유로이 교류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친일’은 대중들이 생각하는 매국적 행위가 아니다. 비도덕적 악행도 아니다. 일본은 더 이상 일제가 아니고 한국도 100년 전 조선이 아니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체제를 유지하고 나아가 번영하고 도약하기 위해 ‘친일’을 해야 한다. 일본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우호적 협력 관계로서 계속 교류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 역사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국이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옛날 박정희는 경제발전 종자돈 마련과 안보를 위해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시키고 극일하기 위해 일본을 배우게 했다. 친일 낙인찍기는 이제 멈춰야 한다.

그동안은 자유시장경제를 만들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느라(여기에도 인재가 없었는데), 반일 이데올로기에 속수무책이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가르치는 사상적, 이론적 가르침과 배움이 빈약했었다. 그러나 지금부터 하면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 한국이 유리한 외교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누구와 화친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상상 속에 그려진 일본을 두고 무조건적인 반일, 혹은 무조건적인 경외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있는 그대로 보면 된다. 지금 한국이 문제 삼고 비판해야 할 것은 과거 일제 ‘잔재’보다는 어디까지나 현재 북한과 좌익 세력에 의한 ‘실체’적인 체제 위협이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오점 하나 없는 순수 민족정기가 아니라 자유라는 가치이다.

한국과 중국의 문화산업에 묘사되는 일본

임 종 화
경기대 무역학과 강사

서 론

현 정부의 반일(反日) 성향은 예견된 것이었다. 사실 한국은 90년대 문민정부 이래로 지속적인 반일성향이 노골적으로 공론화 됐으며, 역사바로세우기와 일제잔재 청산이라는 슬로건은 한국인들의 뇌리에 세대를 불문하고 깊은 인식을 심어줬다. 대표적으로 1995년 8월에 철거한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한바탕 블랙 코미디를 연출한 일제말뚫 사건은 여전히 대다수의 국민들은 사실로 받아들인다.

한국인들에게 반일이라는 주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해방정국과 건국초기부터 진행된 일본이라는 중압감은 단순히 우리를 지배한 존재를 넘어서며 그것이 만들어 내는 논리는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키는 효과마저 가져온다. 이 토론문에서 “일본을 욕하면서 왜 정작 그토록 일본의 상품에 대한 소비는 끊이지 않는가?”와 같은 질 떨어지는 논쟁은 벌이고 싶지 않다. 어찌보면 자본주의 “생리”는 등한시 하면서 가장 노골적인 자본주의적 “소비”를 하는 대상이 한국인들 이라는 사실만을 확인 할 뿐이다.

유럽사회가 가진 “독일 트라우마”처럼 동아시아 에서는 유별나게 한국과 중국이 “일본 트라우마”가 심한 편에 속한다. 제2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같이 지닌 중국이지만 종전 후 곧바로 대륙에서 벌어진 2차 국공내전과 공산당의 팽창에서 항일(抗日)이라는 논쟁거리가 많은 역사적 경험은 사실과 진실을 뛰어넘은 채 중국공산당의 정체성 자체를 대변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본론에서는 한국의 반일주의 영상매체물과 중국의 항일을 다룬 영화들을 살펴보며 반일정서가 지닌 정치적 목적에 대해 설명하겠다.

01. 반일영화, 그 치명적 왜곡

한국사회에서 반일 영화는 심심치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영화라는 영상매체물은 감독이 관객에게 말하고 싶은 주제를 떠나 역사적 사실에 완벽하게 충실할 수도 없다. 하지만 영화만큼 문화적 파급력이 큰 문화컨텐츠는 드물다는 것이다. 2016년 개봉한 영화 덕혜옹주만을 봐도 그렇게 역동적인(?) 주제가 아님에도 560만 관객이 극장을 찾아 흥행에 성공했다.



<사진.3-1> 최근 몇 년간 유별나게 반일영화에 비중이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작품들 중 역사적 사실과 맞는 것은 단 한편도 없다. 모두 반일이라는 공통분모에 감정과잉의 신파적 요소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영화는 판타지물에 가까운 질 낮은 신파극, 이상도 이하도 아님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중 있는 스타급 배우들의 출연에 왜곡된 문화컨텐츠를 소화한다. 위의 네 편중 암살과 밀정에서는 김원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국영화 역사에서 거의 처음 다뤘지만, 그의 정체성과 활동에 대해서는 철저한 왜곡을 했다. 영화와 대중의 주목을 받는 스타가 연기한 인물에 어떤 느낌과 중압감을 지니고 있는지는 더 설명할 필요도 없다.

약산 김원봉이라는 인물이 일본에 의해 가장 높은 현상금의 수배자였다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배경에 깔며 대중에게 다가갔지만 정작 소비에트 코민테른의 산업 국가 일본 흔들기 라는 역사적 사실은 완벽하게 왜곡된다. 1925년부터 창설된 조선공산당의 활동에 소비에트의 자금지원과 의열단 및 김원봉의 활동이 결코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일제강점기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이 소련의 국제공산주의 운동과 맥이 연결되는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과 엄격한 평가가 뒤따라야 하는 이유다.

02. 중국 문화산업에서의 항일(抗日)

오늘날 21세기 신흥대국을 표방하는 중국에게 이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항일 정서다. 중국의 문화컨텐츠들을 볼 때마다 덩치 큰 약골의 불멘소리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중국과 홍콩, 중화권 영화 장르중에 주선율(主旋律) 영화라는 장르가 있다. 중국 공산당 창건이후 크고 작은 사건들을 다룬 영화나 드라마를 통칭하는 개념은 주선율을 장르는 주로 중일전쟁 당시 항일과 국공내전을 중심으로 제작된다.

중국에서는 매년 400편 이상의 영화와 드라마가 제작, 공개된다. 그 중 주선율 컨텐츠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데 문제는 정부가 제작 주체에게 일정 편수 이상의 관련 컨텐츠를 제작할 것을 주문하고 방송국이나 극장에 대해서는 이를 일정 기간 동안 상

영할 것을 강제한다는 점이다.



<사진.3-2>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항일을 다룬 주선율(主旋律)이라는 유형의 영상매체물들이 존재한다. 그 정치적 목적에는 공산당 창건과 공산당의 존립근거가 있다.

당국이 창작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에는 특정 내용을 강조하는 것 이외에 특정 내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점 역시 포함된다. 비단 공산당이나 국가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 뿐 아니라 개혁 개방 정책 시행 이래 나타난 여러 가지 부작용들, 이를테면 양극화, 실업, 농민공(農民工), 개발로 인한 강제 이주 등의 이슈를 다룬 영화는 어김없이 국내 상영 금지 처분을 받는다. 국가가 대중에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과 보여 주고 싶지 않은 부분을 정해서 창작자들에게 제작을 주문하고 그렇게 제작된 콘텐츠를 의무적으로 방영하는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중국에서 중국 사회를 제대로 조망한 영화나 드라마를 만나기란 쉽지가 않다

이러한 장르의 정치적 목적에는 국제사회를 향한 중국의 인권문제들이 배제되는 효과가 있다. 항일전쟁에서 그토록 오늘날까지 문제를 제기하는 남경사건(1937)등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역공은, 파룬궁 탄압과 티벳 문제, 신장 위구르에 대한 군사행동과 지금도 진행 중인 여러 가지 인권문제들이 일정한 시기가 지나자 관심 밖의 문제로 중국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묻히는 효과를 가져왔다.

03. “종군위안부”와 “731부대”

한국과 중국을 제외해도 단연 일본에 대한 시각을 묘사하는 다양한 영상매체물들이 존재한다. 진주만 공습을 다룬 1970년에 미일합작으로 제작된 “도라! 도라! 도라!” 역시나 같은 주제의 2001년 작품인 “진주만(Pearl Harbor)”의 예를 들면 여기서 묘사되는 것은 전쟁이 벌어진 양상과 그 과정의 세밀함이나 화려한 폭격장면 등에 초점을 맞추어 훨씬 더 객관적인 전쟁의 양상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유럽과 미국의 시각은 오리엔탈리즘을 넘어 역사적 사례만큼은 객관적인 시각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진 <3-3>



▲ 센다 가쿠 (1924~2000) ▲ 요시미 요시아키 (1946~ ▲ 모리무라 세이이치 (1933~ 위의 3인물들은 일본의 대표적인 양심적 지성인들이다. 센다 가쿠와 요시아키 교수는 근로정신대 문제를, 모리무라 작가는 관동군 소속 731부대 생체실험을 공식적으로 공론화 시켰다.

반면 한국과 중국은 특히나 현대사에 대한 국가정통성에서 일본을 철저히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90년대부터 한국사회에 커다란 화두를 던졌던 종군위안부 문제와 731부대의 생체실험 문제이다. 이러한 것들이 왜? 90년대 들어 커다란 이슈가 됐을까? 대표적인 사례로는 중국에서 제작된 그로테스크한 괴작 마루타 (1990)를 들 수 있고, 한국에서는 1991년 MBC창사 30주년으로 제작된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본래는 김성종의 일간스포츠 연재소설(1974~1981)을 드라마 제작해 대중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알려지는 효과를 거뒀지만, 정작 이러한 문제제기가 한국과 중국에서 먼저 나온게 아니었다는 것이다. 종군위안부 문제를 처음 제기한 인물은 일본의 저술가였던 센다 카쿠(千田夏光)를 꼽을 수 있다. 그는 1974년 이미 Military Comfort Women이라는 저술과 1시간 26분짜리 영화로 제작해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렸다.

요시미 요시아키 (吉見義明) 주오대 교수는 그러한 문제제기에 이어 1992년 논문을 발표하고 1995년 일본군 군대위안부(日本軍軍隊慰安婦)라는 저서를 발표했다. 또한 저술가인 모리무라 세이이치 (森村誠一) 1981년 펴낸 논픽션 소설 악마의 포식(悪魔の飽食)을 통해 관동군방역급수부대(731부대)의 인간에 대한 생체실험을 공론화 시켰다. 이 과정에서 정작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한국과 중국은 빠져있다.

04. 일본의 우익이 원하는 모습.

괴력난신(怪力亂神)의 강력한 일본

이러한 중국과 한국의 문화컨텐츠에 나타나는 반일정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의 극우 국수주의자들이 원하는 일본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 봐야한다. 예전 일본의 총리였던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1937~2006)총리가 “일본은 세계대전중 한 전선에서만 싸우지 않았다”는 말이 새삼 독특하게 들린다. 위에서 설명한 한국과 중국의 멋들어진 항일용사(?)들이 그토록 열심히 싸운 일본은 그 당시 미국과 러시아 동남아 전선에서는 영국과 네덜란드와도 전투를 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일본은 얼마나 크고 강한 나라였을까? 라는 물음을 던지면서 로망(?)에 젖어드는 일본의 일부 국수주의자들의 얼굴을 떠올려 본다면 오히려 한국과 중국의 반일 정서는 그러한 일본에 더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된다. 일본의 전쟁범죄 문제는 반드시 다뤄야 하는 문제이고 또한 여전히 진행 중인 것들도 많다.

이러한 중국과 한국의 문화컨텐츠가 덮어버리는 것들에는 중국의 1927년부터 중일전쟁이 터지는 1937년까지 10년간의 국공내전을 지워진다. 한국의 경우 조선왕조 말기의 부패와 처참하리만치 빈곤했으며 생산력이라곤 전혀 없었던 20세기 초 조선의 모습은 완벽하게 묻혀진다. 역사는 때로 사악한 장난질을 한 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의 문화컨텐츠들을 보면 더욱더 절실히 느낄 수 있다. 한국의 반일정서는 일본을 괴력난신의 무력집단으로 보이게 하는 것은 우리가 싫어하는 대상들을 도와줘 버리는 오류를 범한다면 몇 명이나 알아들을까? 끝.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전략과 반일 친일 프레임

이 애 란
리버티코리아 포스트 발행인

대한민국에서 이념적으로 가장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북한의 김씨 봉건노예왕조를 추종하는 정권인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고양시키고 자유민주진영의 인사들과 역대 지도자들을 친일프레임에 가두어 매장시키려는 각종 캠페인과 시도들이 난무하고 있다.

진보진영의 최대화두는 반미와 반일을 내세워 우리민족끼리 통일을 이뤄내는 것이며 이것의 종착점은 김씨 공산주의 봉건노예왕조를 대한민국에 이식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반일 친일 프레임은 역대 어떤 좌파정부보다 노골적인 것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익에 심각한 피해를 자초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다.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전략의 핵심의 대한민국에서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민족끼리 통일하는 것으로써 이것은 북한의 김씨 공산주의 봉건노예왕조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의심없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문재인정권과 진보의 탈을 쓴 공산주의 추종세력의 반일, 친일 프레임 전략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전략과 결부시켜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진보진영이라고 하는 특히 북한의 김씨 공산주의 봉건노예왕조에 호의적인 종북세력은 왜 반일 친일에 집착하는가

1. 종북 진보세력은 통일에 있어서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인 우리민족끼리를 내세우고 있으며, 북한에서 떠들어대는 우리민족끼리는 한 민족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이 우상화하고 있는 김일성민족을 의미하는 것이다.

북한은 김일성을 친일을 배격하고 반일을 넘어 항일의 영웅으로 내세우는데 성공했다고 볼수 있다. 김일성이 북한의 최고지도자로서 추앙받고 3대세습을 실현할수 있게 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김일성이 어린시절부터 반일운동에 나섰고 항일투쟁을 통해 북한을 일제식민지에서 해방한 영웅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곳곳에 김일성의 항일투쟁유적이라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상화를 하고 있고 김정일 또한 항일의 전쟁터에서 항일의 여성영웅인 김정숙을 어머니로 둔 항일영웅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후계자라고 내세웠다.

그러다보니 현재 김정은도 자신을 백두혈통이라고 하면서 북한에서 김일성의 항일유적지로 미화된 삼지연을 자신의 고향으로 둔갑시키는 대규모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 김일성은 반일과 항일의 대명사이며 북한주민들을 일제의 식민지, 고통에서 해방한 해방자이자 영웅이기 때문에 누구도 김일성을 넘보아서는 안 되는 신적인 인물로 둔갑시키기 위해 역사에 대한 심각한 왜곡을 단행했다.

대한민국의 진보라 칭하는 종북세력들의 특징은 대한민국 건국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산업화 대업을 이룬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특별히 친일프레임을 씌어 매도하고 있고 역사를 왜곡하고 창작되고 날조된 사실들을 퍼뜨려 국민들에게 반일감정을 강요하고 있다. 그들은 북한의 김일성은 반일을 넘어 항일을 했고 친일청산을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국가의 정통성은 친일청산을 하지 않고 건국을 단행한 대한민국은 정통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좌파정권만 들어서면 친일청산을 떠들고 과거사정리를 주장하면서 끊임없이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반일, 친일프레임은 오로지 북한의 김씨 공산주의 봉건노예왕조에 정당성을 부여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없애버리고 북한의 적화통일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료된다.

2. 북한은 대남적화통일 전략에 있어서 갇힌 전략을 주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한미일이라는 갇에서 일본과 미국이라는 갇끈을 잘라버려 갇을 날려 버려야 하는데 그중에서 일본이라는 갇끈을 잘라버리면 미국이라는 갇끈은 자동적으로 잘라지기 때문에 강력한 한미일3각동맹을 해체하고 대한민국을 손쉽게 적화통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은 어떠한가

문재인정권 들어서 자행된 위안부와 강제징용문제로 말미암아 현재 한일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고 일본 내에서는 한일외교관계를 단절해야 한다는 여론까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어쩌면 북한이 요구하는 일본이라는 갇 끈이 떨어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한미관계도 악화시켜 문재인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왕따 신세가 되고 있으며 악화된 한미

반일·친일 프레임을 깨자3: 일본을 이해하고 같이 발전해야

관계는 더욱더 밀착된 미일관계로 재편성되어 어쩌면 한 세기전의 가쓰라-태프트 조약 체결 당시의 상황을 연상하게 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어처구니없고 타산 없는 반일외교정책에 의해 오히려 일본이 한 세기 전에 꿈꾸어왔던 대동아 공영권의 꿈을 실현시켜주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태는 심각해지고 있다.

자신의 머리에서 나온 자국의 이익과 자국민을 위한 외교정책이 아닌 북한에 의해 계획되고 북한에 의해 조종되며 북한을 위한 외교정책을 실행하는 듯이 보이는 문재인정권의 외교참사가 결국은 반일을 외치만 가장 친일적인 행각으로 나타나고 있고 대한민국 국가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경제를 파탄시켜 국민을 도탄에 들게 하는 반역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3. 국가경영능력이 전무하고 지금까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공작원들의 지령에 의해 움직여 왔던 세력들의 무지와 무능력을 감추기 위해 과거사를 들춰내어 전정권의 허물을 들춰내고 그것으로 반사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반일, 친일프레임을 사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국가의 경영권을 따내었으면, 어떻게 하든 국가경영을 혁신하고 실적을 올려 국가를 번영하게 하고 국민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해야 하지만 생애기간 내내 아스팔트에서 화염병을 던지고 국가의 기간들을 파괴하는 행위만을 일삼으면서 정권에 도전하고 공권력에 짊돌 던지는 것을 민주화라고 우겨대면서 자가 만족을 누리왔던 무능한 집단으로써 할수 있는 것이 적폐청산과 과거사청산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일을 해보지 못했으니 할줄 아는 일도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도 못하고 무언가는 해야 하겠으니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정권을 책임지고도 오직 타인의 과거를 들춰내어 망신주고 욕하고 공격하는 일밖에는 할 수 없는 주사파 김씨 공산주의 봉건왕조 세력의 한계가 바로 반일, 친일 프레임 씌우기로 나타나는 것이다.

일제 식민지는 우리세대와 미래세대가 다시는 되풀이 하면 안 되는 아픈 역사이지만 그 시대의 아픔을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는 세대가 왜곡된 시선으로 재단하며 끊임없이 되풀이하여 사죄를 요구하고 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것이다.

조선왕조가 일제식민지로 전락한 것은 조선왕조의 무능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진실들은 묵인한 채 일본에 70년이 넘도록 지속적인 배상과 사과를 요구하는 것도 얼마나 유치하고 어리석은 일인가

마지막으로 현 정권과 진보좌파진영의 반일, 친일 프레임 씌우기 전략은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의 일환인 남남갈등을 고조시키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서로를 불신하고 갈등 하도록 만들며 국민통합을 훼손시켜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 막고 대한민국을 멸망으

반일·친일 프레임을 깨자3: 일본을 이해하고 같이 발전해야

로 치닫게 하려는 것이다.

과거를 들추면 싸움만 하게 되고 서로 상처만 입게 된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분을 망각하고 앞장서서 적폐청산 과거사정리만을 국정的重要과제로 내세우며 국민의 갈등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그토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대통령이 현재 중국에서 성노예로 팔려다니는 북한여성들의 아픔에는 입도 뻥긋 하지 않고 있고 과거 80년이 지난 징용병의 피해를 보상해주려고 앞장서면서 중국에서 강제북송되어 끌려간 북한주민들이 김정은 살인정권에 의해 고문당하고 처형당하는 현재진행형의 야만적 행위에 대해서는 모르는 척하는가

최근 영국의 민간단체가 조사하여 발표한 북한에서 팔려온 9살 짜리 소녀들이 중국에서 성노예로 유린당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서 문정부의 어느 당국자가 말 한마디 한 적이 있는가

대한민국 전역에 위안부 소녀상을 세우고 심지어 징용병상을 세워 반일감정을 지속적으로 조장하면서, 현재도 팔려가고 있고 지금도 북송되어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어가는 북한주민들에 대해서는 어째서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화세력에게 묻고 싶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반일, 친일 프레임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전략에 추종하는 국가 파괴행위라고 말하고 싶다.

또한 한미일 자유 민주주의 동맹을 해체하고 북한의 김씨 공산주의 봉건노예왕조를 대한민국에 이식시키려는 반국가적, 반자유민주주의적 이적행위라고 사료된다.

앞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세력은 김씨 공산주의 봉건노예왕조를 추종하는 세력들의 반일, 친일 프레임을 국가파괴행위 자유민주주의 말살행위, 국민반역행위로 간주하고 견결하게 싸워야 할 것이다.

[illegible]

자유경제포럼

2019. 5. 31